



2008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The Policy for Operation of Public Works in Seoul

윤 형 호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The Policy for Operation of Public Works in Seoul

2008

연구진

연구책임 윤 형 호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원 임 석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현황

- 일반 공공근로와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음.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는 중·고령층, 일용직, 주부, 저학력자가 대부분인데 반해, 청년공공근로 참가자는 전직이 학생이 많고 고학력자가 대부분이었음.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는 대부분 세대주였고, 절반이 부양가족이 있는 반면,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대부분은 비세대주였고,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는 모두 대부분 가계소득이 없는 반면 일부 청년공공근로 참가자는 가계소득이 있음.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는 대부분이 사업 참가이전 1년 이상의 실업기간을 거친 장기 실업자였는데 반해 청년공공근로 참가자는 대부분이 1년 미만의 실업기간을 거친 단기 실업자였음.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는 4회 이상 장기 반복참여자의 비중이 높았으나, 청년공공근로 참가자는 1회 혹은 단기 반복참여자의 비중이 높았음.
- 일반 공공근로의 반복참여자의 특성은 여성, 40대, 세대주, 저학력자, 일용직 혹은 주부 출신, 장기실업자임.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반 및 청년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고 생계 혹은 가족부양을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음.
 -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에 대한 일시적 일자리 창출효과는 있으나, 사업 참가 후 재취업률은 낮음.

2. 공공근로 참가자의 행태분석

1) 개인 및 가구특성

-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30~50대가 대부분이었고, 일반 공공근로 사업 참가자와 여성의 비중이 높았으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임.
- 부양가족이 있는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이었고, 그 중 부양가족이 1~3명인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음.

2) 과거 취업 및 구직경험

-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기 이전에 민간직장에서 퇴직하였거나 혹은 단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개인 혹은 가족문제로 인한 자발적인 퇴직이 68.3%로 대부분이었고,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의 문제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직이 나머지 31.7%였음.
-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외에 민간직장에서 일을 그만둔 시기에 대한 질문에 2년 이상이 가장 많았음.
-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을 포함하여 실업 이후 최근 1년간 구직등록 여부 및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이 구직등록을 한 적이 있고, 등록횟수는 1~3회가 가장 많았음.
 - 최근 1년간 구직등록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면접 요청을 받은 응답자는 76.9%였고, 그 중 77.6%가 1~3회 가장 면접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면접 경험자 가운데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제시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67.5%였고, 그 중 1~2회 가장 구직제의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대다수였음.

- 구직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49.2%가 체력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직제의를 거절하였다고 함.
- 실업기간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직업능력 부족과 나이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음.

3) 향후 취업 전망

- 직전 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이후부터 2008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의 활동을 묻는 질문에 38.9%만이 집안 사업을 돕거나 민간직장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였고, 나머지는 집에서 쉬면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공공근로사업이 없다면 민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전망이 있는냐는 질문에 45.2%가 전망이 없다고 답변함.
 - 민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전망이 없는 이유로는 대부분이 직업능력 부족 혹은 나이문제 때문이라고 답변함.
- 응답자의 44.2%는 민간직장에서 비정규직 혹은 낮은 임금의 일용직으로 취업이 된다면 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함.
 - 일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의 과반수 이상인 60.7%가 임금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힘.
- 개인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부분인 71.8%가 의향이 없다고 답변함.
 - 개인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금이 없다는 답변이 58.6%로 가장 많았음.
- 공공근로사업과 민간 일자리를 비교할 때, 공공근로사업이 임금수준은 낮지만, 일의 강도와 만족도·근무환경은 높다고 응답함.

3. 공공근로의 이론적 분석

1) 공공근로자의 특성

(1) 장기실업(persistent unemployment, hysteresis)

- 1980년대 유럽의 고실업률과 장기실업자 현상은 실업의 이력현상(hysteresis effect)을 보여주었음. 이는 일단 개인이 실업상태에 들어가면 일정 시간 내에 재취업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에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 직업을 잃은 이후 기존 직업능력이 노후화되어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함.
- Topel (1990)은 이러한 현상이 1970~80년대 미국에서도 중요했었고 실업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이 전 직장보다 15~40% 삭감되었다고 함. 이것은 이들의 기존 직업능력이 노후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함.
- 실업자의 고용능력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게 되고 장기실업자의 고용능력은 매우 떨어지게 됨. 해외 기간분석(duration analysis)에 의하면 실업기간이 길수록 취업확률은 낮아지게 됨 (Machin and Manning 1999).
- 공공근로 참가자들의 속성은 이러한 장기실업자의 대표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음. 공공근로는 이들 장기실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취업의지를 제고하기 보다는 장기실업자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함.

2) 공공근로의 효과

- 공공근로는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과 저소득층 생계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참여자 개인과 노동시장에 많은 부작용을 미치고 있음. 다음에서 대표적인 부작용과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알아보고자 함.

(1) 대체효과(crowding effect)

- 설문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느끼는 공공근로사업의 임금과 근무여건은 민간사업장과 비교해 볼 때 임금은 낮고, 근무여건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과거 일자리를 제외받았지만 거절하였다고 함.
-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공공근로 참가자들은 민간일자리와 공공일자리의 효용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함. 즉 단순히 민간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기보다는 공공일자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거나 일반균형 측면에서 보면 공공근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민간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음(crowding effect). 즉 공공근로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잉여를 창출하기보다는 공공과 민간 간의 일자리 대체만을 가져옴.

(2) 외부효과(external effect)

- 공공근로 참가자들이 공공근로의 근로조건이 민간일자리의 근로조건보다 높다고 판단한다면 민간부문의 임금수준을 올리고 빈 일자리(vacancy)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민간부문에 경제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초래함.

(3) 근로의욕 감퇴(demoralized work attitude)

- 이진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이후부터 2008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특정한 직업 혹은 일거리가 없이 집에서 쉬었던 자발적인 실업자가 많고, 공공근로사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거나 생계를 의존하는 경향이 생겨남.

- 직업능력 쇠퇴 혹은 나이,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주의 편견 때문에 공공 근로 참가자들은 실업기간 중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함. 응답자의 42.86%는 민간직장에서 비정규직 혹은 낮은 임금의 일용직으로 취업이 되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 공공근로사업은 이처럼 근로의욕이 감퇴된 저 고용능력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함.

(4) 인적자본 마모의 방지(precautionary measure for human resource attrition)

-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참가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집에서 쉬겠다고 응답함. 이러한 현상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거나 음주, 도박 등 비생산적인 행위에 참여하도록 해 정신과 건강을 해칠 수 있음.
- 공공근로가 없다면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인적자본이 마모되어 고용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공공근로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적자본 마모를 방지하는 예방적 역할을 함.

3) 고용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

- 대표적인 고용정책은 직업알선(job search), 공공근로(temporary work experience at public sectors), 직업훈련(job training)임. Heckmann et al. (1999)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된 고용정책의 비용과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직업알선을 제외한 이들 정책은 참가자가 얻는 소득효과보다 고용정책 비용이 크다는 것을 밝혀냈음.
- 공공근로는 대체효과에 의해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반면 민간노동시장의 임금증가와 구직난만 가중시킴. 따라서 정부의 공공근로는 예산만 사용할 뿐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 한편 공공근로가 없다면 참가자들이 여전히 민간부문에서 일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음. 그렇게 되면 이들은 빈곤과 실업에 따른 질병, 직업능력의 손실, 정신적 박탈감으로 사회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공근로는 이러한 사회적인 손실을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함.

4.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1)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 및 방향성

- 응답자의 대부분인 85.8%가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 가운데 49.38%는 공무원 인력부족으로 자치구 사업수요를 처리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28.40%는 생계가 곤란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9.75%는 일시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취업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공공근로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일시적인 일자리를 얻은 후에도 민간시장으로의 재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실직자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음.
-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규모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가 현행 규모대로 유지해야한다고 답변함.
 -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40.00%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에 비해 할당인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힘.
 -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44.44%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무태도불량, 지시불복종 등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들었음.

2)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성과 평가

- 참가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근무태도, 지시 및 관리지침에 대한 협조성, 개별 사업 목적에 맞는 기능보유의 3개 항목 모두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 공공근로사업의 세부사업별 작업성과를 묻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음.
 - 정보화추진사업은 주민복지 및 행정보조 측면에서 작업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공공생산성사업의 작업성과는 양호함. 특히, 도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시설물정비사업, 녹지조성사업의 작업성과는 상대적으로 우수함.
 - 공공근로서비스사업의 작업성과는 양호함.
 - 전체적으로 환경정화사업의 작업성과는 우수함.

3)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운영 방향

- 공공근로사업의 세부사업별 필요 인력특성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응답함.
 - 정보화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청년층, 대학재학이상의 교육수준과 일정 수준의 기능 및 숙련도를 지닌 참가자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함.
 - 공공생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선호하였고, 교육수준·성별·기능 및 숙련도와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단 디자인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기타사업의 경우 고졸의 교육수준을

요구하였음.

-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고졸을 선호하였으나, 성별 기능 및 숙련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정화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수준, 기능 및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고, 성별에 대한 선호도 없었으나, 청년층보다는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가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공공근로사업의 적합한 운영형태에 대한 질문에 정보화추진사업 일부(통계베이스 구축사업, 홍보 및 안내사업, 기타 전산화사업)와 공공생산성사업, 그리고 공공서비스사업 일부(청소년 지도사업, 환경감시사업), 환경정화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나머지 사업들은 공공이 직접 관리해야한다는 응답자가 많았음.

4) 공공근로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의 시사점

(1) 공공근로 목적의 변질

- 공공근로가 실업자에게 공공부문에서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유도한다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공공근로 지침과 어긋나게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얻고, 참가자들이 공무원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질됨.
- 한편 현재의 3% 정도의 실업률에서는 IMF 경제위기 당시의 실업률 감소 및 고용창출이라는 공공근로 목적을 유지할 필요도 없음.

(2) 공공근로 운영방식의 변화 필요성

- 공공근로가 원래 목적에서 변질되어 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고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시장접근이 필요함.

5. 정책건의

1) 공공근로의 존치 필요성

- 공공근로의 존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

(1) 긍정적인 요인

- 행정보조 인력의 확보, 사업의 성과, 주민생계보호, 장기적인 인적자본 유지 등을 들 수 있음
 -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함.
 - 전산화 작업, 환경개선, 재활용자원 수집 등과 같이 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에서 필요인력을 조달하고 있음.
 - 대부분의 공공근로 사업의 평가가 양호하여 공공재원의 가치에 상응하는 결과(value for money)를 산출하고 있음.
 - 공공근로 참가자들은 중·고령이고 직업능력이 떨어져 공공근로가 없다면 민간 노동시장으로부터 떠나 일자리 없이 지낼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빈곤과 건강악화 등으로 장래 공공부문이 그들의 생활지원을 전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이들 취약계층이 최소한 인적자원 능력을 유지하고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방안이기도 함.

(2) 부정적인 요인

- 대체효과, 정치적인 고려,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에 대한 외부효과를 들 수 있음.
 - 공공근로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므로 공공재원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민간부문의 구인난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임금상승의 요인이 됨.
 -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근로 참가자들이 민간부문 일자리 제의가 있더라도 공공근로 근무조건이 낫다는 이유로 공공근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대체하는 것에 그쳐 일자리 창출효과는 없음.
 -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고 있음.

(3) 공공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소득의 양극화와 장기적인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정책 당국 혹은 선거직 자치단체장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차원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 하지만 공공근로가 갖는 경제적인 부작용 및 참가자가 갖는 도덕적 해이를 고려할 때 공공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자치구 구청장은 주민의 선거권을 의식하여 공공근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혹은 실질적인 성과에 관계없이 공공근로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함.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이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근로를 유지 혹은 확대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
- 다만 현재 공공근로 일자리는 공공근로를 원하는 주민의 약 절반 정도이고 아직도 저소득층 주민이 많으므로 공공근로는 필요성이 있음.

- 공공근로의 부정적 기능이 많지만 순기능과 정치적 요인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공공근로 규모를 줄이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운영개선 안을 준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개선안이 될 수 있음.

2) 민간위탁 개선방안

- 사업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공공근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먼저 공공근로를 행정기관에서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민간시장 부문과의 상충,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해야함.
-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유도한다는 사업목적에서 벗어나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인력조달원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를 창출하거나 혹은 공공가치(value for money)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되어야 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맡기고자 함.

(1) 민간위탁사업의 특성

- 적절한 민간위탁 사업의 대상이 되는 세부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일선현장에서 공공근로 관리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추천, 생산성, 충분한 수요, 성과관리 측정을 들 수 있음.

① 공무원 추천

-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은 행정자료 및 정보를 취급하는 전산화 작업과 행정정보조 업무를 민간 이양이 어려운 사업으로 구분한 반면 단

순 환경미화 작업 또는 재활용자원 수집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분함.

② 생산성

- 설문 및 현장조사에 의해 생산성이 확인되는 사업으로 주로 공공생산성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 일부, 그리고 환경정화사업이 민간위탁 대상이 됨.

③ 수요의 적정성

- 수요 작업량이 일정량 이상이고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재활용자원 수거사업 같이 안정성이 있는 사업이 적절함.

④ 성과관리 및 측정

- 단순 반복하는 작업으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작업과 일정한 공간에서 작업함으로써 역시 성과관리와 측정이 용이한 작업이 적절함.

(2) 민간위탁 사업

- o 위의 4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7가지 세부사업을 민간위탁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

<표 1>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

대분류	세부사업	특성
공공생산성	도로정비사업	충분한 수요, 성과측정이 가능
	하천변정비사업	충분한 수요, 성과측정이 가능
	시설물정비사업	충분한 수요, 성과측정이 가능
	녹지조성사업	충분한 수요, 성과측정이 가능
공공서비스	중소기업지원사업	일정현장 근무, 민간회사가 성과관리
	청소년지도사업	충분한 수요, 일정현장 근무, 성과측정이 가능
환경정화	분리 및 수거사업	충분한 수요, 일정현장 근무, 성과측정이 가능

(3) 사업형태

① 사회적 기업

- 공공근로 참가자들이 저소득층, 대부분 40~50 대이고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취약계층이므로 이들의 인적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최근 이러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이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 형태의 민간사업을 추진함.
- 사회적 기업은 원칙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므로 노동력의 채용과 배치에서 효율성을 기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에서 발견되었던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 혹은 미진한 사업성과는 방지할 것임.

② 운영주체 및 설립예산

-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확보는 다음과 같이 함. 최초 필요한 설립예산은 민간공익재단출연금, 국고지원, 운영기관 출연금으로 함. 자치단체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 및 일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 일부 자치구는 유사한 사업구조와 형태를 갖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음.
- 운영기관으로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처럼 NGO(비정부조직)와 사회복지기관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영리적인 사업경험이 풍부한 인력과 견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NGO들은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경험과 관심은 있지만 사업능력이 떨어져 사업예산을 행정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함.

③ 공공의존도 및 자립능력

-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은 지속적인 사업수요에 따른 매출창출인데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수요의 상당부분(예: 70~80%)을 보장할 수 있음.

- 다만 사회적 기업은 매출을 공공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민간 시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이는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 사례를 들면 도쿄도의 실버인재센터의 경우 전체 일감 수주의 절반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절반은 민간시장에서 얻음.

3) 청년 공공근로의 개선안

(1) 청년 공공근로의 지속

-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들은 주로 행정보조 혹은 전산화 작업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은 공공근로를 통해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교육수준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작업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므로 청년 공공근로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청년 공공근로자 대부분이 단기간 참여하므로 도덕적인 해이가 없고 직업탐색과 직장 적응훈련, 직업능력 강화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

(2) 공공관리의 필요성

-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들이 민간위탁이 어려운 행정업무 보조 및 정보처리 업무에 종사하므로 이들의 인적자원 관리는 행정기관이 맡을 수밖에 없음.

(3) 취업알선교육 강화

-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들이 사업기간 동안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의식 제고를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 성과는 미미함.

- 현재 공공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직알선 및 상담 업무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강화하여야 함. 예를 들면 지방노동청 고용지원사무소와 연계하여 이들이 주5일 정도의 취업능력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4) 공공근로기간 제한

- 청년층에게 공공근로는 소득지원과 일자리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직업 탐색 제공과 직업능력 강화가 목적이므로 참여기간은 단기간에 그쳐야 함. 또한 일부 장기간 공공근로에 참여한 청년층의 재취업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공공근로기간을 제한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3. 연구의 흐름도	6
4. 선행연구	7
제2장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현황	13
제1절 공공근로사업의 개요	13
1. 공공근로사업의 배경	13
2. 공공근로의 성격변화	14
제2절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이	16
1. 중앙정부 주도 (1998~2004년)	16
2. 서울시로 이전 (2005~2007년)	18
제3절 200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세부계획	24
1. 사업의 개요	24
2. 공공근로 대상사업	25
제3장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분석	31
제1절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분석	31
1.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분석	31

2.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분석	46
3. 요약 및 정리	59
제2절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노동행태	69
1. 설문조사 개요	69
2. 응답자의 개인 및 가구특성	70
3. 과거 취업 및 구직경험	72
4. 향후 취업 전망	77
5. 요약 및 이론적 분석	81
제3절 사업별 참가자 특성 분석	87
1. 사업별 참가자 분석	87
제4장 공공근로사업 평가 및 정책방안	95
제1절 공공근로사업 평가	95
1. 설문조사 개요	95
2.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규모	98
3.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성과 평가	102
4. 공공근로사업의 운영방향	117
5. 요약 및 시사점	139
참고문헌	145
영문요약	149

표 목 차

<표 1-1>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이점	9
<표 2-1> 지방이양 이전의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인원규모	17
<표 2-2> 서울시 고용동향	17
<표 2-3> 공공생산성 사업 세부내역	19
<표 2-4> 공공서비스 사업 세부내역	20
<표 2-5> 환경정화 사업 세부내역	21
<표 2-6> 2005~2007년 공공근로사업 사업별 선발인원 및 집행예산	22
<표 2-7> 2005~2007년 청년 및 일반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 및 집행예산	23
<표 2-8> 2008년 공공근로사업 추진단계	24
<표 2-9> 2008년 공공근로사업 예산 집행계획	25
<표 2-10> 2008년 공공근로사업 대상사업	26
<표 3-1>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개인특성	33
<표 3-2>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가계 관련 특성	35
<표 3-3>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소득 및 세금 관련 특성	36
<표 3-4>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실업기간	37
<표 3-5>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연령에 따른 성별 분포	38
<표 3-6>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성별 전직업 분포	39
<표 3-7>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성별 세대주 및 부양가족	40
<표 3-8>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성별 교육수준	41
<표 3-9>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공공근로 참여 횟수	42
<표 3-10>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참여횟수	42
<표 3-11>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학력에 따른 참여횟수	43
<표 3-12>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연령에 따른 참여횟수	44
<표 3-13>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전직업에 따른 참여횟수	45

<표 3-14>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가계관련 특성에 따른 참여횟수	45
<표 3-15>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실업기간에 따른 참여횟수	46
<표 3-16>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의 개인특성	49
<표 3-17>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개인 및 가계특성	50
<표 3-18>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의 소득 및 세금 관련 특성	52
<표 3-19>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의 실업기간 및 반복참여횟수	53
<표 3-20>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의 재취업 여부	54
<표 3-21>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재취업 여부	54
<표 3-22>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의 연령에 따른 재취업 여부	55
<표 3-23>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의 전직업에 따른 재취업 여부	55
<표 3-24>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재취업 여부	56
<표 3-25>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의 가계소득 유무에 따른 재취업 여부	57
<표 3-26>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의 참여횟수에 따른 재취업 여부	58
<표 3-27> 청년 공공근로 참가자의 실업기간에 따른 재취업 여부	59
<표 3-28>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 및 청년공공근로 참가자 특징 비교	67
<표 3-29>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설문 의 목적·대상 및 내용	70
<표 3-30> 응답자의 개인 특성	71
<표 3-31> 응답자의 가구 특성	72
<표 3-32> 민간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단순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73
<표 3-33> 민간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단순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73
<표 3-34> 실업 이후 최근 1년간 구직등록 횟수	74
<표 3-35> 면접횟수	75
<표 3-36> 면접을 통한 구직제의 횟수	75
<표 3-37> 구직제의 거절 이유	76
<표 3-38> 일거리를 찾지 못한 이유	76
<표 3-39> 직전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후 2008년 2단계 참여까지의 활동	77
<표 3-40> 민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전망	77

<표 3-41> 민간직장의 정규직으로 취업할 전망이 없는 이유	78
<표 3-42> 민간직장에서 비정규직 혹은 낮은 임금의 일용직으로 취업 의사 ...	78
<표 3-43> 민간직장에서 비정규직 혹은 낮은 임금의 일용직으로 취업 의사가 없는 이유 (복수응답)	79
<표 3-44> 개인사업 의향	79
<표 3-45> 개인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이유 (복수응답)	80
<표 3-46> 공공근로사업과 민간 일자리와의 비교	80
<표 3-47> 2005~2007년도 사업별 참가자 분포	89
<표 3-48> 2005~2007년 누적 연령별 사업별 참가자 분포	90
<표 3-49> 2005~2007년 성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참가 평균분포	91
<표 3-50> 2005~2007년 누적 학력수준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참가 전체 평균분포	92
<표 4-1> 공무원 설문조사 참가자 현황	96
<표 4-2>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	98
<표 4-3>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한 이유 (복수응답)	99
<표 4-4> 공공근로사업이 불필요한 이유 (복수응답)	99
<표 4-5> 공공근로사업의 적절한 규모	100
<표 4-6> 확대개편 의견에 대한 이유 (복수응답)	101
<표 4-7> 축소개편 의견에 대한 이유 (복수응답)	101
<표 4-8>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한 평가	102
<표 4-9> 정보화추진사업에 대한 주민복지 측면에서의 평가	104
<표 4-10> 정보화추진사업에 대한 행정보조 측면에서의 평가	105
<표 4-11> 정보화추진사업에 대한 전체적 평가	106
<표 4-12> 공공생산성사업에 대한 주민복지 측면에서의 평가	107
<표 4-13> 공공생산성사업에 대한 지역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측면에서의 평가	108
<표 4-14> 공공생산성사업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평가	109

<표 4-15> 공공생산성사업에 대한 전체 평가	110
<표 4-16>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주민복지 측면에서의 평가	111
<표 4-17>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평가	112
<표 4-18>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평가	113
<표 4-19>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전체 평가	114
<표 4-20>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주민복지 측면에서의 평가	115
<표 4-21>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지역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	115
<표 4-22>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평가	116
<표 4-23>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116
<표 4-24> 사업별·연령별 인력수준 (정보화추진사업)	117
<표 4-25> 사업별·교육수준별 인력수준 (정보화추진사업)	118
<표 4-26> 사업별·성별 인력수준 (정보화추진사업)	119
<표 4-27> 사업별·기능 및 숙련도별 인력수준 (정보화추진사업)	120
<표 4-28> 정보화추진사업 선호 인력수준	121
<표 4-29> 사업별·연령별 인력 수준 (공공생산성 사업)	122
<표 4-30> 사업별·교육수준별 인력 수준 (공공생산성 사업)	123
<표 4-31> 사업별·성별 인력 수준 (공공생산성 사업)	124
<표 4-32> 사업별·기능 및 숙련도별 인력 수준 (공공생산성 사업)	125
<표 4-33> 공공생산성사업 선호 인력 수준	126
<표 4-34> 사업별·연령별 인력 수준 (공공생산성 사업)	127
<표 4-35> 사업별·교육수준별 인력 수준 (공공서비스 사업)	128
<표 4-36> 사업별·성별 인력 수준 (공공서비스 사업)	129
<표 4-37> 사업별·기능 및 숙련도별 인력 수준 (공공서비스 사업)	130
<표 4-38> 공공서비스사업 선호 인력 수준	131
<표 4-39> 사업별·연령별 인력 수준 (환경정화사업)	132
<표 4-40> 사업별·교육수준별 인력 수준 (환경정화사업)	132

<표 4-41> 사업별·성별 인력 수준 (환경정화사업)	133
<표 4-42> 사업별·기능 및 숙련도별 인력 수준 (환경정화사업)	133
<표 4-43> 환경정화사업 선호 인력 수준	133
<표 4-44> 사업별 사업운영 방향 (정보화추진사업)	134
<표 4-45> 사업별 사업운영 방향 (공공생산성 사업)	135
<표 4-46> 사업별 사업운영 방향 (공공서비스 사업)	136
<표 4-47> 사업별 사업운영 방향 (환경정화사업)	137
<표 4-48> 각 사업별 적합 운영형태	138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3-1> 공공근로 실태와 참가자 특성	68
<그림 3-2> 일반 공공근로 일자리 이론적 분석	87
<그림 4-1> 공무원 설문체계	97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공공근로의 필요성 검토
 - 공공근로사업의 지방이양 이후인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서울시의 월별 평균 실업률은 4.4%로 전국 월별 평균 실업률인 3.5%보다 0.9%p 높은 실정임.
 - 노동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현 시점에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중년여성 등에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로 공공근로의 생산성 저해요인이 있고 일부 참가자의 반복적 참가로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시장부문의 취업으로 이끌려는 본래의미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의 실패를 조사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근로사업의 평가와 역할의 재검토
 - 공공근로는 2005년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이전의 경기순환기의 실업률 감소라는 목적에서 지방정부의 생산성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변경되었음.
 - 이렇게 사업성격이 변경된 후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향후 공공근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근로가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과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라는 본래 의미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와 만약 역할이 변경되었다면 현재의 공공근로 체계가 변화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공공근로 세부사업이 자치구에서 필요한 행정보조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와 주민복리에 기여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공공근로사업은 고용기회 확대, 근로능력 보존, 생계보전의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향후 사업의 운영방안을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및 참여인원, 세부사업을 분석하고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와 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실태와 공공근로의 노동시장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고 공공근로사업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공공근로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참가자들이 궁극적으로 민간시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첫째, 2005년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및 참여인원의 특성을 분석하여 공공근로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둘째, 청년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재취업률과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들의 참여빈도를 분석하여 공공근로의 목적달성 여부와 공공근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셋째, 공공근로 참여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근로의욕, 고용능력 등을 조사하고 공공근로의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함.
 - 넷째, 공공근로의 노동시장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고 세부사업별 성과를 분석함.

- 공공근로 가운데 민간운영이 가능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민간운영 방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운영형태 및 운영방법에 관한 정책제언을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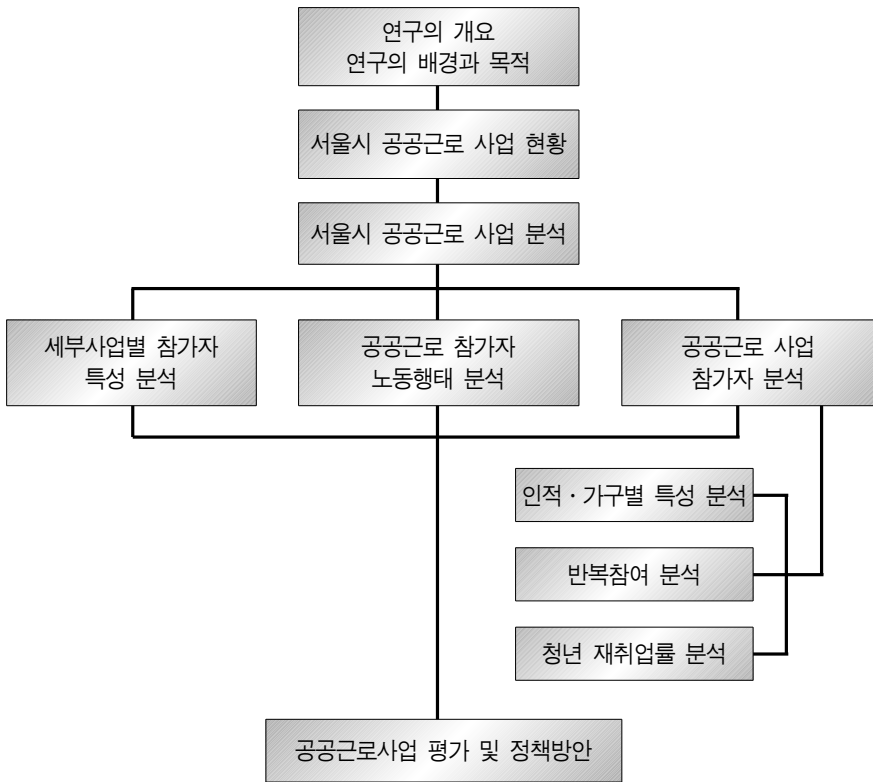
- 이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공공근로사업의 유형과 구조
 -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규모와 참여자의 특성별 분석
 - 공공근로사업 참여빈도 분석 및 참여자의 고용능력 분석
 -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별 효과분석
 - 공공근로의 민간사업화 방안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문헌 및 이론연구,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함.
- 문헌 연구
 - 국내 선행연구 조사
 - 노동정책의 이론적 연구
- 통계자료 분석
 - 각 자치구별 원자료 분석을 통한 공공근로참여자의 특성 연구
 - 각 자치구별 원자료 분석을 통한 세부사업별 참가자 특성 연구

- 워크넷 자료 분석을 통한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재취업 여부
- 각 자치구별 원자료 분석을 통한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 여부
- 설문조사
 - 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부사업별 실시현황과 성과를 파악
 - 참가자 설문을 통해 참가자들의 노동행태와 고용능력 분석

3. 연구의 흐름도



<그림 1-1> 연구 흐름도

4. 선행연구

1) 문헌고찰

- 이경원(1998)은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와 관리자(담당공무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공공근로사업의 전개방향을 제시하였음.
 - 공공근로사업은 단기적 일자리 제공에는 효과적이지만, 비생산적이고 불분명한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유효한 노동수요 창출은 어렵다고 판단함.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참여자격을 강화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수요자 중심의 참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함.
 -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체계를 확립하는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함.
- 김정혜(1999)는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생계보호 및 생산성, 사회적 기여도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성격규명 및 전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공공근로자 및 인근주민들의 주관적 평가결과를 통해 공공근로사업이 생계보호에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생산성에 있어서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발견함.
 -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지원 효과와 더불어 공공근로자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함.
 - 실업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즉, 실업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기적 전략과 생활안정이라는 단기적 긴급과제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김학춘(1999)은 공공근로의 생산성 제고와 재원 낭비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함.
 -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실업정보체계 미비와 비실업자의 참여 문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 미비,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이었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청자격 개선, 취로사업과의 차별화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 사업체계 관리개선 등을 제시함.
- 임동진(2001)은 공공근로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자원 활용의 왜곡, 참여자 근로의욕부족, 재취업부진, 사기업 인력난, 비적격자 참여 등 부정적인 요인을 발견하였음.

2) 선행연구의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 기존 문헌들을 통해서 나온 공공근로사업의 중요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유효한 노동수요 창출의 어려움
 - 연령·능력 및 기술과 상관없이 공공근로사업에 배치
 - 사업의 생산성 부족
 - 저소득층의 배제 가능성
 -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 부족

3)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공공근로사업 초기인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의 연구이며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였음. 또한

당시 공공근로의 성격이 경기순환기 실업률 해소를 위한 단기일자리 창출이었으므로 당시 연구들은 소득지원효과와 같은 개인복리에 중점을 둬.

- 이 연구는 공공근로가 자치단체로 이관된 후의 연구이며 실업률이 안정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보전이라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기 보다는 세부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또한 참가자들의 고용능력, 참가자의 노동행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함.
- 또한 이 연구는 선행연구처럼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혹은 저소득층의 생계보조라는 부분적 균형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가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일반적 균형 관점에서 공공근로의 효율성을 살펴봄.
- 더불어 기존의 연구들은 설문조사에 의해 공공근로 참가자들의 일자리 대한 수요와 만족도를 측정하였지만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고용능력 분석과 재취업 여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함.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워크넷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공공근로참가자의 재취업률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들의 참여동기와 고용능력을 분석함.
- 기존 연구는 분석을 위해 표본자료를 사용하였지만 이 연구는 전수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석의 신뢰성이 높음.
- 이 연구에서는 세부사업의 특성과 성과분석을 토대로 노동시장과 합치하는 운영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표 1-1>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이점

	선행연구	이 연구
분석기간	중앙정부 주도기간	지방정부 이양기간
사업목적	실업률 해소와 경기회복 사업수행	지방생산성 사업수행
자료	표본자료	전수자료
효율성 평가 관점	부분균형 관점	일반균형 관점
참가자 노동행태 분석여부	없음	있음

제2장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현황

제1절 공공근로사업의 개요

제2절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이

제3절 200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세부계획

제2장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현황

제1절 공공근로사업의 개요

1. 공공근로사업의 배경

1)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배경

-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인한 대량 실업자 발생
 - 1997년 말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기불황의 지속과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실시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였음.
 - 1998년 2월에는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1999년 2월에는 실업자가 178만명 (실업률8.6%)에 달해 월별 실업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 고용창출 및 생계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추진
 - 1998년 2월 정부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인정적인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업자들의 고용창출과 생계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실업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음.
 - 1998년 5월부터 정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공공근로사업은 IMF 외환위기에 따라 발생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계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유지시켜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음.
 -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 동안 총 4조 2,501억원(국비 2조 5,101억원, 지방비 1조 7,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0만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통한 사회 안전망도 구축하고자 하였음.

2)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및 관리주체

- 공공근로사업은 고(高)실업 시기에 제도적인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자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실업대책임.
- 공공근로사업의 제도적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 사업에 있음.
- 공공근로사업의 지방이양
 - 공공근로사업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명목으로 2005년부터는 사업 지원비를 분권교부세에 통합하여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2. 공공근로의 성격변화

1) 중앙정부 주도 기간(1998~2004)

① 경기순환기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일자리

-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경제악화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보험과 같은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게 소득지원을 하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 공공근로를 확대하였음.
-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기가 안정을 찾게 되면서 경기순환기 실업률 완

화를 위한 공공근로의 역할은 끝나게 되고 획일적인 사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공공근로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단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를 중단하는 대신 지역생산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이양함.

② 일반적 균형 측면에서 일자리

- 중앙정부는 국내 실업률 수준, 실업자의 공공근로로 인한 소득효과가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공근로의 규모와 시기를 정함.

2) 지방정부 이양기간(2005~)

① 지역 행정서비스 생산성사업을 위한 일자리

- 공공근로는 단순히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역할을 넘어 지역의 정보처리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사업 등 행정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창구로 발전함.

② 지역 저소득자 생계보호를 위한 일자리

- 중앙정부는 실업률 감소, 실업자 소득지원, 경기회복이라는 경제정책 밑에서 공공근로를 추진한 반면 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는 지역내의 저소득자 생계지원이라는 국지적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운영하고 있음.

③ 국지적 균형측면에서 일자리

- 기초단체는 지역내의 저소득자 지원이라는 국지적 정책목표만을 고려하고 있어서 공공근로가 경제전체에서 일자리를 순수하게 증가시키는지, 참가자의 고용능력이 향상되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 노동시장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음.

제2절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이

1. 중앙정부 주도 (1998~2004년)

- 공공근로사업의 지방이양 이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 시기의 마지막해인 1999년을 기점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1998년 예산액 1,022억원 가운데 1,015억원이 집행되었고, IMF 시기의 마지막해인 1999년에는 예산액 3,122억원 가운데 3,008억원이 집행되었음.
 -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4년에는 최저액인 예산액 37,885백만원 가운데 36,637백만원만이 집행되었음.
- 선발인원도 예산규모 추이와 마찬가지로 1999년을 기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음.
 - 1999년 신청자 339,569명 가운데 277,605명이 선발되었으나, 2000년에는 178,413명, 2001년에는 76,438명, 2002년에는 56,862명, 2003년에는 31,357명, 2004년에는 21,980명만이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로 선발되었음.
 - 신청인원 대비 선발인원의 비율을 보면 1999년 81.8%로 가장 높았으나, 2004년에는 52.4%에 불과해 공공근로사업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공공근로 초기에는 민간부문에서 취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희망 인원을 가능한 한 많이 참여시켰으나 최근에는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공공근로의 일차리 창출역할이 축소됨.

<표 2-1> 지방이양 이전의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인원규모

(단위 : 백만원, %, 명, 일)

연도	예산규모			신청 및 선발인원				참여연인원	사업기간	사업일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선발비율	1일평균 참여인원			
1998	102,232	101,517	99.3	64,841	51,625	79.6	19,245	3,328,597	05.01~12.31	163
1999	312,173	300,802	96.4	339,569	277,605	81.8	46,805	10,837,835	01.11~12.30	231
2000	179,996	172,900	96.1	228,352	178,413	78.1	31,354	6,842,739	01.10~12.30	210
2001	83,862	82,721	98.6	117,770	76,438	64.9	14,668	3,364,019	01.08~13.29	231
2002	69,240	63,842	92.2	65,302	56,862	87.1	11,386	2,607,719	01.07~12.28	229
2003	39,914	39,014	97.7	48,327	31,357	64.9	6,936	1,588,912	01.06~12.27	229
2004	37,885	36,637	96.7	41,954	21,980	52.4	4,675	1,091,522	01.05~12.25	234

자료 : 서울특별시

-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실업자 보호라는 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예산 및 인원규모는 서울시의 실업률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의 실업률은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된 1998년 7.6%로 최고점이었고, 1999년에는 7.0%였음.
 -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실업률이 4%대에 머무는 등 안정세를 보이면서 공공근로사업은 축소되었음.

<표 2-2>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5세 이상 인구	7,908	7,944	8,015	8,042	8,038	8,027	8,039	8,115	8,161	8,187
경제활동인구	4,783	4,820	4,904	4,952	4,992	4,977	5,062	5,129	5,132	5,144
취업자	4,418	4,485	4,668	4,727	4,783	4,753	4,831	4,890	4,906	4,940
실업자	365	335	236	224	209	224	232	239	227	203
비경제활동인구	3,125	3,124	3,111	3,091	3,046	3,050	2,976	2,986	3,028	3,044
경제활동참가율	60.5	60.7	61.2	61.6	62.1	62	63	63.2	62.9	62.8
실업률	7.6	7.0	4.8	4.5	4.2	4.5	4.6	4.7	4.4	3.9
고용률	55.9	56.5	58.2	58.8	59.5	59.2	60.1	60.3	60.1	6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2. 서울시로 이전 (2005~2007년)

1) 사업유형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은 4개의 사업유형(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에 23개 사업과 91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됨.
- 정보화추진사업은 6개 사업과 16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짐
 - 정보화추진사업은 주로 주민관련 자료 혹은 행정자료를 전산화하거나, 행정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는 홈페이지 구축 등 전산관련 홍보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공생산성사업은 8개 사업과 38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됨
 - 공공생산성사업은 도로정비, 하천변정비, 시설물정비, 농업기반 및 녹지조성, 국토공원화 등 도시시설정비 및 환경조성 사업과 더불어 중소기업지원 및 디자인개발 등 기타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공서비스사업은 8개 사업과 34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됨
 - 공공서비스사업은 업무보조 및 상담, 감시 및 계도, 사회복지 및 청소년 교육관련, 새주소부여, 실태조사 등과 같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정화사업은 1개 사업과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쓰레기 및 폐비닐 등을 분리·처리하거나 수거하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표 2-3> 공공생산성 사업 세부내역

사업유형	사업명	세부사업명
공공생산성 사업	도로정비사업	도로 확장 및 포장
		도로 신설(마을길 등)
		도로 보수·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보도블록 정비
	하천변정비사업	하수도 준설·정비
		하천제방 개·보수
		하상 준설
		둔치 개·보수
		저수지 정비
	시설물정비사업	재해복구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일반시설물보수(노인정 등)
		저소득층 주거개선
		체육시설 정비(월드컵경기장 등)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연학습장 조성
		농업용배수로 준설
		농업용배수로 개·보수
		객토사업
		휴경지생산화사업(주말농장 포함)
	녹지조성사업	농산물 가공산업지원
		숲가꾸기 사업
		가로수 식재 및 정비
		자연휴양림 정비
		조경 수식재 및 화원 조성
	국토공원화사업	방화선 설치
		잔디조성사업
		소공원화사업
		철도변 공원화사업
		공공시설물 정화사업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폐임목 활용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타사업	디자인 개발사업	
	기타사업	

<표 2-4> 공공서비스 사업 세부내역

사업유형	사업명	세부사업명
공공서비스 사업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공공근로업무 보조
		민원도우미
		행정상담(오브즈만 등)
		행정모니터링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노인가정 도우미
		소년소녀가장 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가정방문 간호사업
		탁아사업
		사회단체지원사업
		학교급식 지원
		취업알선센터 운영
	새주소부여사업	저소득층 이·미용 도우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실태조사사업	농지
		지가
		물가
		행정통계
		각종 점검사업
	청소년 지도사업	보조교사
		청소년공부방 지도
		청소년 폭력예방
	환경감시 사업	하천오염 감시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매연감시
	물관리 사업	수돗물 절수사업
		상수원 구역정화사업
	기타사업	산불감시
		안전계도
		교통질서 계도
문화재 감시		
생활민원 기동지원사업		
Food Bank 지원사업		
기타 사업		

<표 2-5> 환경정화 사업 세부내역

사업유형	사업명	세부사업명
환경정화사업	분리 및 수거사업	쓰레기 분리처리사업
		폐비닐 수거사업
		기타 사업

2) 예산규모 및 선발인원

- 2005~2007년의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규모 및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사업별로는 공공생산성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에 집중 배치되어 있고, 종류별로는 일반 공공근로사업이 청년공공근로사업보다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시의 2005~2007년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공공생산성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에서의 인원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2005년과 2006년 선발인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공공생산성사업 > 공공서비스사업 > 환경정화사업 > 정보화추진사업 순으로 나타남.
 - 2007년에는 이전 년도와 달리 서울시의 복지부문 사업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공공서비스사업 비중이 증가하였음. 비중에 따른 순서를 보면 공공서비스사업(35.44%) > 공공생산성사업(31.72%) > 환경정화사업(19.37%) > 정보화추진사업(13.47%) 순이었음.
- 서울시의 2005~2007년 공공근로사업 집행예산을 살펴보면 선발인원과 유사한 행태를 보임.
 - 2005년 및 2006년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예산을 보면, 공공생산성사업 > 공공서비스사업 > 환경정화사업 > 정보화추진사업 순으로 나타남.
 - 2007년에는 공공서비스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공공생산성사업의 비중이 감소함. 공공서비스사업(32.14%) > 공공생산성사업(29.12%) > 환경

정화사업(16.23%) > 정보화추진사업(12.46%) 순이었음.

<표 2-6> 2005~2007년 공공근로사업 사업별 선발인원 및 집행예산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사업유형	선발인원		집행예산	
		인원	비중	금액	비중
2005년	정보화추진 사업	3,659	15.09	6,917	15.12
	공공생산성 사업	9,386	38.72	14,847	32.45
	공공서비스 사업	7,015	28.94	12,291	26.86
	환경정화 사업	4,183	17.25	7,002	15.30
	관리비 및 재해보상비	-	-	465	1026
	합계	24,243	100.00	45,752	100.00
2006년	정보화추진 사업	3,038	14.78	5,554	14.00
	공공생산성 사업	7,423	36.12	12,808	32.28
	공공서비스 사업	6,355	30.92	11,419	28.78
	환경정화 사업	3,736	18.18	6,395	16.12
	관리비 및 재해보상비	-	-	3504	888
	합계	20,552	100.00	39,679	100.00
2007년	정보화추진 사업	2,549	13.47	4,939	12.46
	공공생산성 사업	6,004	31.72	11,538	29.12
	공공서비스 사업	6,709	35.44	12,732	32.13
	환경정화 사업	3,666	19.37	6,431	16.23
	관리비 및 재해보상비	-	-	399	1007
	합계	18,928	100.00	39,629	100.00

자료: 서울특별시

- 2005~2007년까지의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을 살펴보면, 매년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선발인원과 집행예산의 비중이 청년공공근로사업보다 높았음.

<표 2-7> 2005~2007년 청년 및 일반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 및 집행예산

(단위: 명, 백만원, %)

단계	청년		일반		전체		
	선발인원	비중	선발인원	비중	선발인원	비중	
2005년	1단계	1,522	29.85	3,576	70.15	5,098	100.00
	2단계	1,596	29.09	3,890	70.91	5,486	100.00
	3단계	1,473	28.12	3,766	71.88	5,239	100.00
	4단계	1,803	21.41	6,617	78.59	8,420	100.00
	소계	6,394	26.37	17,849	73.63	24,243	100.00
2006년	1단계	1,804	30.26	4,158	69.74	5,962	100.00
	2단계	1,603	31.69	3,456	68.31	5,059	100.00
	3단계	1,470	33.07	2,975	66.93	4,445	100.00
	4단계	1,285	25.27	3,801	74.73	5,086	100.00
	소계	6,162	29.98	14,390	70.02	20,552	100.00
2007년	1단계	1,389	29.39	3,337	70.61	4,726	100.00
	2단계	1,412	28.97	3,462	71.03	4,874	100.00
	3단계	1,450	30.40	3,320	69.60	4,770	100.00
	4단계	1,354	29.71	3,204	70.29	4,558	100.00
	소계	5,605	29.61	13,323	70.39	18,928	100.00

단계	청년		일반		전체		
	집행예산	비중	집행예산	비중	집행예산	비중	
2005년	1단계	3,143	31.74	6,759	68.26	9,901	100.00
	2단계	3,516	34.26	6,747	65.74	10,263	100.00
	3단계	3,064	30.15	7,098	69.85	10,162	100.00
	4단계	3,457	22.41	11,969	77.59	15,426	100.00
	소계	13,180	28.81	32,572	71.19	45,752	100.00
2006년	1단계	3,795	32.48	7,890	67.52	11,685	100.00
	2단계	3,194	33.38	6,377	66.62	9,571	100.00
	3단계	3,058	36.07	5,420	63.93	8,477	100.00
	4단계	2,571	25.85	7,375	74.15	9,946	100.00
	소계	12,618	31.80	27,062	68.20	39,679	100.00
2007년	1단계	3,108	30.77	6,991	69.23	10,099	100.00
	2단계	3,330	34.15	6,420	65.85	9,750	100.00
	3단계	2,849	30.09	6,620	69.91	9,469	100.00
	4단계	12,231	30.86	27,398	69.14	39,629	100.00
	소계	21,517	31.21	47,429	68.79	68,946	100.00

자료: 서울특별시

제3절 200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세부계획¹⁾

1. 사업의 개요

- 200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사업기간은 2008년 1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231일이고, 사업비는 30,479백만원, 총 참여인원은 17,800명 규모임.

<표 2-8> 2008년 공공근로사업 추진단계

단계	날짜
1단계	2008년 1월 7일 ~ 2008년 3월 28일
2단계	2008년 4월 7일 ~ 2008년 6월 27일
3단계	2008년 7월 7일 ~ 2008년 9월 26일
4단계	2008년 10월 6일 ~ 2008년 12월 26일

- 2008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총 30,479백만원 가운데 시 직접사업비는 2,792백만원, 자치구 사업비는 27,687백만원임. 분류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5,709백만원, 청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4,770백만원임.
 - 시 직접사업비 2,792백만원 가운데 1,175백만원은 일반 공공근로사업, 1,617백만원은 청년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 서울시의 경우 청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수요 및 기대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자치구 사업비 27,687백만원 가운데 14,534백만원은 일반 공공근로사업, 13,153백만원은 청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음.

1) 이 절은 서울특별시 “2008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함.

<표 2-9> 2008년 공공근로사업 예산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시 직접사업비	구 지원사업비
계	30,479	2,792	27,687
일반 공공근로	15,709	1,175	14,534
청년 공공근로	14,770	1,617	13,153

자료 : 서울특별시, “2008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2. 공공근로 대상사업

1) 선정방향

- 200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됨
 -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
 - 기존 추진사업 가운데 생산성이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
 - 기존 지원업무 및 공권력 대행업무의 추진은 금지함. 즉, 새로운 행정업무가 아닌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의 단순 지원업무의 추진을 억제하고, 또한 주·정차 단속과 같은 직접적인 공권력 대행업무도 금지함. 다만 시책의 홍보·계도 등 시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이를 허용함.
 - 2008년 중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
 - 특히 2008년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실업대책을 중점 추진함. 따라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하여 청년층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되, 특히 고학력 청년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공을 살리고 직장체험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함.

2) 대상사업

- 대상 사업은 15개 정보화사업, 32개 공공생산성사업, 35개 공공서비스지원사업, 35개 환경정화 사업으로 나뉘어 시행함.

<표 2-10> 2008년 공공근로사업 대상사업

사 업 군	내용별 분류(예시)
정보화사업 (15개)	• 주민관련 전산화, 행정정보 DB구축, 행정자료 전산화, 통계베이스 구축, 홍보 및 안내사업, 기타 전산화 사업
공공생산성사업 (32개)	• 도로정비, 하천정비, 시설물 정비, 농업기반 조성, 녹지 조성, 국토 공원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기타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35개)	• 업무보조 및 상담, 사회복지 향상, 실태조사 사업, 청소년 지도, 환경 감시, 물관리 사업, 기타사업
환경정화 사업 (35개)	• 재활용품 분리사업, 재활용품 수거사업, 쓰레기 분리수거, 공공시설물 정화·정비, 폐임목 활용, 상수원구역 정화, 하천쓰레기 수거

자료 : 서울특별시, "2008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3) 예산집행 원칙

- 시 지원예산은 각 단계별 예산을 배정할 때 청년 공공근로사업비와 일반 공공근로사업비를 구분하고 집행도 이를 구분하여 집행함.
 - 청년 공공근로사업비는 만18세 이상 만35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에 지출하되 청년층 참여율을 90%이상 유지함.
- 인건비
 - 인건비는 일용임금, 교통비 및 간식비, 4대 보험료 등과 같이 참여자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
 - 인건비는 전체사업비의 80%이상, 단위사업별 인건비도 전체사업비의 80%이상 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교통비와 간식비는 1일 3천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 가능함.
- 자재비 등 사업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설계비, 장비구입과 같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하는 예산인 사업비는 구입 및 임차료, 자재비 등으로 집행 가능함.
 - 자재비 등 사업비의 총액은 전체 사업비의 20%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리비 및 용역사업비
 -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쇄비, 여비 등 부대경비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 가능함.

4) 신청자격

- 200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은 당해 단계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서울시민으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함.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단, 부득이한 경우 다른 시·도 거주자도 참여가능
- 다음의 경우에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격을 배제함
 -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실업급여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정기소득이 있는 자 혹은 그 배우자

제3장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분석

제1절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특성분석

제2절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노동행태 분석

제3절 세부사업별 참가자 특성분석

제3장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분석

제1절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분석

1.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분석

1)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참가자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의 원래 목적인 1) 일시적 일자리 제공과 2) 저소득자의 생계유지라는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분석 대상

- 공공근로사업의 지방정부 이양 이후인 2005년 1단계부터 2007년 4단계 까지 총 10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강남구)에서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총 6,156명의 원자료를 사용함.

(3) 분석 방법 및 내용

-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의 개인특성과 반복참여 여부 및 횟수를 분석하고 개인특성과 반복참여 횟수를 교차분석함.
- 반복참여 횟수와 개인특성간의 교차분석은 장기 반복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

할 수 있음.

- 한편, 반복참여자의 개인특성 분석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처음 참가할 때의 인적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2) 기본 특성 분석

(1) 개인특성 분석

- 일반적 특성
 -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는 40대 이상 중고령자와 일용직과 주부, 그리고 저학력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
 - 여성이 57.78%로 42.22%인 남성보다 15.56%p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
 - 50대가 49.04%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35%, 40대 미만이 10.90%, 60대가 4.71%로 나타나 대부분이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자인 것을 알 수 있음.
- 전(前)직업
 - 전직업별로 살펴보면, 기타(36.79%) > 일용근로자(27.08%) > 주부(17.41%) > 회사원(5.64%) > 서비스업(4.82%) > 자영업(4.63%) > 제조업(2.60%)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어 일용근로자와 주부가 많음.
- 교육수준
 - 결측값(항목 무응답) 64개를 제외한 참가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30.66%) > 초졸(24.64%) > 중졸(22.93%) > 무학력(13.66%) 등의 순으로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함.

- 자격증 보유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 대부분인 99.61%는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여부
 - 참가자 가운데 11.35%인 699명이 장애인으로 나타남.
- 노숙자
 - 전체의 0.71%인 44명만이 노숙자였음.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는 6,156명 가운데 0.08%인 5명이었음.
-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 일반 공공근로 참여자 중 0.19%인 12명만이 생활보호대상자였음.

<표 3-1>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개인특성

(단위: 명, %)

변수		빈도	비중
성별	여성	3,557	57.78
	남성	2,599	42.22
연령	40대 미만	671	10.90
	40대	2,176	35.35
	50대	3,019	49.04
	60대	290	4.71
전직업	공무원	32	0.52
	회사원	347	5.64
	농림수산업	22	0.36
	제조업	160	2.60
	서비스업	297	4.82
	자영업	285	4.63
	주부	1,072	17.41
	학생	9	0.15
	일용근로자	1,667	27.08
기타	2,265	36.79	

<표 계속>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개인특성

(단위: 명, %)

변수		빈도	비중
교육수준	무학력	832	13.66
	초졸	1,501	24.64
	중졸	1,397	22.93
	고졸	1,868	30.66
	전문대졸	140	2.30
	대졸	339	5.56
	대학원	15	0.25
	해당없음	64	-
자격증	있음	24	0.39
	없음	6,132	99.61
장애인	해당	699	11.35
	해당없음	5,457	88.65
노숙자	해당	44	0.71
	해당없음	6,112	99.29
국가유공자	해당	5	0.08
	해당없음	6,151	99.92
생활보호자	해당	12	0.19
	해당없음	6,144	99.81
합계		6,156	

주: 각 교육수준별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비율임.

(2) 가계관련 특성 분석

- 세대주
 - 총 6,156명의 참가자 가운데 세대주는 77.92%인 4,797명임.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없는 참가자는 56.06%인 3,451명임.
 - 부양가족이 있는 참가자 가운데 부양가족수가 1인인 경우는 1,125명으로 총 참가자의 18.27%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참가자의 41.59%임.

<표 3-2>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가계 관련 특성

(단위: 명, %)

변수		빈도	비중	
세대주	해당	4,797	77.92	
	해당 없음	1,359	22.08	
부양가족	없음	없음	3,451	56.06
		소계	3,451	56.06
	있음	1인	1,125	18.27
		2인	832	13.52
		3인	529	8.59
		4인	219	3.56
		소계	2,705	43.94
합계		6,156		

(3) 재산 및 세금관련 분석

- 전반적 특징
 - 일반 공공근로 참여자의 특징은 가계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남.
- 가계소득 관련
 - 참가자 중 가계소득이 없는 참가자가 76.14%인 4,68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자동차 보유
 - ~~95.52%~~ 5,883명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상태
 - 주거상태의 경우 기타(36.99%) > 월세(33.76%) > 전세(22.34%) > 자

가 (6.92%)의 순으로 나타나 차가 혹은 기타에서 주거하는 참가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종합토지세 납부 여부
 - 대부분인 96.26%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재산세 납부 여부
 - 91.49%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의료보험료 납부 여부
 - 총 참가자 가운데 79.00%는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소득 및 세금 관련 특성

(단위: 명, %)

변수		빈도	비중
가계소득	있음	1,469	23.86
	없음	4,687	76.14
자동차	있음	276	4.48
	없음	5,883	95.52
주거상태	자가	426	6.92
	전세	1,375	22.34
	월세	2,078	33.76
	기타	2,277	36.99
종토세	납부함	230	3.74
	납부안함	5,926	96.26
재산세	납부함	524	8.51
	납부안함	5,632	91.49
의료보험료	납부함	1,293	21.00
	납부안함	4,863	79.00
합계		6,156	

(4) 실업기간

-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전의 실업기간과 관련된 특징을 보면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개월 이상이 55.95%인 3,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미만인 23.86% (1,469명), 6개월이 15.84%(975명) 순임.

<표 3-4>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실업기간

(단위: 명, %)

기간	빈도	비중
1개월 미만	1,469	23.86
1개월	11	0.18
2개월	20	0.32
3개월	58	0.94
4개월	13	0.21
5개월	75	1.22
6개월	975	15.84
7개월	19	0.31
8개월	17	0.28
9개월	26	0.42
10개월	17	0.28
11개월	12	0.19
12개월 이상	3,444	55.95
합계	6,156	100

3) 성별에 따른 특성 분석

(1) 연령

- 성별에 상관없이 40대 이상 중·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여성의 경우 50대가 49.93%(1,7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40대가

34.24%(1,218명), 40대 미만인 11.61%(413명) 순이었음. 60대 이상은 4.22%(150명)에 불과하였음.

- 남성의 경우도 50대가 47.83%(1,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6.86%(958명), 40대 미만이 9.93%(258명), 60대 이상이 5.39%(140명) 순으로 나타남.

<표 3-5>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연령에 따른 성별 분포

(단위: 명, %)

변수		여성	남성	전체
40대 미만	빈도	413	258	671
	비중	11.61	9.93	10.90
40대	빈도	1,218	958	2,176
	비중	34.24	36.86	35.35
50대	빈도	1,776	1,243	3,019
	비중	49.93	47.83	49.04
60대 이상	빈도	150	140	290
	비중	4.22	5.39	4.71
합계	빈도	3,557	2,599	6,156
	비중	100.0	100.0	100.0

(2) 전직업

- 성별에 따른 전직업을 살펴보면 여자는 주부, 남자는 일용직이 가장 많았음.
- 여성의 경우 전직업이 기타라고 기재된 참가자가 35.65%(1,26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부 29.32%(1,043명) > 일용근로자 21.51%(765명) > 서비스업 5.00%(178명) > 회사원 3.49%(124명) > 자영업 2.73%(97명) > 제조업 1.69%(60명) > 공무원 0.31%(11명) > 농림수산업 0.20%(7명) > 학생 0.11%(4명)의 순이었음.

- 남성의 경우도 전직업이 기타라고 기재된 참가자가 38.36%(9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일용근로자 34.71%(902명) > 회사원 8.58%(223명) > 자영업 7.23%(188명) > 서비스업 4.58%(119명) > 제조업 3.85%(100명) > 주부 1.12%(29명) > 공무원 0.81%(21명) > 농림수산업 0.58%(15명) > 학생 0.19%(5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3-6>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성별 전직업 분포

(단위: 명, %)

변수		여성	남성	전체
공무원	빈도	11	21	32
	비중	0.31	0.81	0.52
회사원	빈도	124	223	347
	비중	3.49	8.58	5.64
농림수산업	빈도	7	15	22
	비중	0.20	0.58	0.36
제조업	빈도	60	100	160
	비중	1.69	3.85	2.60
서비스업	빈도	178	119	297
	비중	5.00	4.58	4.82
자영업	빈도	97	188	285
	비중	2.73	7.23	4.63
주부	빈도	1,043	29	1,072
	비중	29.32	1.12	17.41
학생	빈도	4	5	9
	비중	0.11	0.19	0.15
일용근로자	빈도	765	902	1,667
	비중	21.51	34.71	27.08
기타	빈도	1,268	997	2,265
	비중	35.65	38.36	36.79
합계	빈도	3,557	2,599	6,156
	비중	100.0	100.0	100.0

(3) 가계관련

- 성별에 상관없이 세대주이자 부양가족이 없는 참가자의 비중이 높았음.
 - 여성의 경우 세대주인 참가자가 70.48%(2,507명)인데 비해 비세대주인 참가자는 29.52%(1,050명)에 그쳤고, 남성의 경우도 세대주인 참가자가 88.11%(2,290명)인데 비해 비세대주인 참가자는 11.89%(309명)에 불과함.
 -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참가자가 58.17%(2,069명)인데 반해 부양가족이 있는 참가자는 41.83%(1,488명)이었고, 남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참가자가 53.17%(1,382명)인데 반해 부양가족이 있는 참가자는 46.83%(1,217명)이었음.

<표 3-7>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성별 세대주 및 부양가족

(단위: 명, %)

변수		여성	남성	전체	
세대주여부	해당	빈도	2,507	2,290	4,797
		비중	70.48	88.11	77.92
	해당없음	빈도	1,050	309	1,359
		비중	29.52	11.89	22.08
부양가족	있음	빈도	1,488	1,217	2,705
		비중	41.83	46.83	43.94
	없음	빈도	2,069	1,382	3,451
		비중	58.17	53.17	56.06
합계		빈도	3,557	2,599	6,156
		비중	100.0	100.0	100.0

(4) 교육수준

-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가 과반수 이상임.
 - 여성의 경우 고졸 30.08%(1,061명) > 초졸 27.11%(956명) > 중졸 21.86%(771명) > 무학력 14.66%(517명) > 대졸 3.88%(137명) > 전문대

졸 2.35%(57명) > 대학원 0.06%(2명)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고졸 31.46%(807명) > 중졸 24.41%(626명) > 초졸 21.25%(545명) > 무학력 12.28%(315명) > 대졸 7.88%(202명) > 전문대졸 2.22%(57명) > 대학원 0.51%(13명) 순으로 나타남.

<표 3-8>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성별 교육수준

(단위: 명, %)

변수		여성	남성	전체
무학력	빈도	517	315	832
	비중	14.66	12.28	13.66
초졸	빈도	956	545	1501
	비중	27.11	21.25	24.64
중졸	빈도	771	626	1,397
	비중	21.86	24.41	22.93
고졸	빈도	1,061	807	1,868
	비중	30.08	31.46	30.66
전문대졸	빈도	83	57	140
	비중	2.35	2.22	2.30
대졸	빈도	137	202	339
	비중	3.88	7.88	5.56
대학원	빈도	2	13	15
	비중	0.06	0.51	0.25
합계	빈도	3,527	2,565	6,092
	비중	100.0	100.0	100.0

주: 각 교육수준별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비율임.

4)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여횟수

- 2005년 1단계부터 2007년 4단계까지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들의 참여횟수를 살펴보면, 2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비중이 1회 참여한 참가자보다 많았고, 이들 가운데 4회 이상 장기 반복참여자가 가장 많았음.

- 1회 참가자는 37.95%인 2,336명이고 2회 이상은 62.0%임.
- 4회 이상 장기 반복 참여자는 전체의 27.84%, 반복 참여자²⁾의 44.87%였음.

<표 3-9>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공공근로 참여 횟수

(단위: 명, %)

참여횟수	빈도	비중
1회	2,336	37.95
2회	1,204	19.56
3회	902	14.65
4회 이상	1,714	27.84
합계	6,156	100.0

(1) 성별 참여횟수

- 여성의 장기 반복참가 비중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음.
- 남성 장기 반복참여자 비중은 전체의 26.36%인데 반해 여성 장기 반복 참여자 비중은 28.93%였음.

<표 3-10>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참여횟수

(단위: 명, %)

횟수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회	1,294	36.38	1,042	40.09	2,336	37.95
2회	686	19.29	518	19.93	1,204	19.56
3회	548	15.41	354	13.62	902	14.65
4회 이상	1,029	28.93	685	26.36	1,714	27.84
합계	3,557	100.00	2,599	100.00	6,156	100.00

2) 4회 이상 참가자를 장기 반복 참여자라고 정의한 이유는 1년 4단계의 공공근로사업에서 최대한 참여 가능한 횟수가 3회이기 때문에 4회 이상 참가자의 경우 1년 이상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였다는 의미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2) 교육수준별 참여횟수

- 교육수준에 따른 참여회수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1회 단순 참여자의 비중이 높음. 고졸 혹은 그 이하에서 장기 반복참여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음.
- 교육수준별로 1회 참가자의 비중을 보면 전문대 45.00%, 대졸 40.71%, 대학원 60.00%인데 반해 무학력자 39.30%, 초졸 35.64%, 중졸 35.79%, 고졸 38.97%였음.
- 또한 장기 반복참여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졸과 초졸이 각각 31.64%, 31.25%로 30%를 웃뎀. 한편 전문대졸 22.14%, 대졸 22.12%였음.

<표 3-11>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학력에 따른 참여횟수

(단위: 명, %)

횟수	무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전체	
1회	빈도	327	535	500	728	63	138	9	2,300
	비중	39.30	35.64	35.79	38.97	45.00	40.71	60.00	37.75
2회	빈도	210	293	242	344	34	68	2	1,193
	비중	25.24	19.52	17.32	18.42	24.29	20.06	13.33	19.58
3회	빈도	116	204	213	292	12	58	0	895
	비중	13.94	13.59	15.25	15.63	8.57	17.11	0.00	14.69
4회 이상	빈도	179	469	442	504	31	75	4	1,704
	비중	21.51	31.25	31.64	26.98	22.14	22.12	26.67	27.97
합계	빈도	832	1,501	1,397	1,868	140	339	15	6,092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각 교육수준별 비중은 결측 값을 제외한 유효비율임.

(3) 연령별 참여횟수

- 연령별로 참여횟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40~50대에서 장기 반복참여자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 장기 반복참여자의 비중은 40대가 29.5%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29.4%, 40대 미만은 23.0% 순이었으며, 반면 60대 이상은 10.7%로 가장 낮았음.

<표 3-12>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연령에 따른 참여횟수

(단위: 명, %)

횟수		40대 미만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1회	빈도	281	819	1,089	147	2,336
	비중	41.9	37.6	36.1	50.7	37.9
2회	빈도	147	383	590	84	1,204
	비중	21.9	17.6	19.5	29.0	19.6
3회	빈도	89	332	453	28	902
	비중	13.3	15.3	15.0	9.7	14.7
4회 이상	빈도	154	642	887	31	1,714
	비중	23.0	29.5	29.4	10.7	27.8
합계	빈도	671	2,176	3,019	290	6,156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4) 전직업별 참여횟수

- 전직업이 일용근로자, 주부인 참가자의 장기 반복참여 비중이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높았음.
- 장기 반복참여 비중은 일용근로자(31.97%) > 농림수산업(31.82%) > 주부(29.10%) > 자영업(27.72%) 서비스업(26.94%) > 제조업(26.25%) > 기타(25.74%) > 학생(22.22%) > 회사원(20.75%) > 공무원(12.50%)의 순이었음.

<표 3-13>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전직업에 따른 참여횟수

(단위: 명, %)

횟수		공무원	회사원	농림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영업	주부	학생	일용 근로자	기타	전체
1회	빈도	15	137	9	64	121	122	402	5	615	846	2,336
	비중	46.88	39.48	40.91	40.00	40.74	42.81	37.50	55.56	36.89	37.35	37.95
2회	빈도	6	75	4	33	57	47	200	2	278	502	1,204
	비중	18.75	21.61	18.18	20.63	19.19	16.49	18.66	22.22	16.68	22.16	19.56
3회	빈도	7	63	2	21	39	37	158	0	241	334	902
	비중	21.88	18.16	9.09	13.13	13.13	12.98	14.74	0.00	14.46	14.75	14.65
4회 이상	빈도	4	72	7	42	80	79	312	2	533	583	1,714
	비중	12.50	20.75	31.82	26.25	26.94	27.72	29.10	22.22	31.97	25.74	27.84
합계	빈도	32	347	22	160	297	285	1,072	9	1,667	2,265	6,156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 가계관련 특성별 참여횟수

- 세대주의 장기 반복참여 비중은 29.96%인데 비해 비세대주는 20.38%였음. 세대주의 장기 반복참여 비중이 아닌 경우보다 높았음.
- 부양가족이 있는 참가자의 장기 반복참여 비중은 28.43%인데 반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27.38%로 큰 차이는 없음.

<표 3-14>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가계관련 특성에 따른 참여횟수

(단위: 명, %)

횟수		세대주		부양가족		전체
		해당	해당 없음	유	무	
1회	빈도	1,759	577	1,005	1,331	2,336
	비중	36.67	42.46	37.15	38.57	37.95
2회	빈도	904	300	542	662	1,204
	비중	18.85	22.08	20.04	19.18	19.56
3회	빈도	697	205	389	513	902
	비중	14.53	15.08	14.38	14.87	14.65
4회 이상	빈도	1,437	277	769	945	1,714
	비중	29.96	20.38	28.43	27.38	27.84
합계	빈도	4,797	1,359	2,705	3,451	6,156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 실업기간 및 참여횟수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이전 실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의 장기 반복참여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실업기간별 장기 반복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12개월 이상 실업자(28.95%) > 1~11개월(27.03%) > 1개월 미만(25.94%) 순으로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 반복참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15>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실업기간에 따른 참여횟수

(단위: 명, %)

횟수		1개월 미만	1~11개월	12개월 이상	전체
1회	빈도	567	504	1,265	2,336
	비중	38.60	40.55	36.73	37.95
2회	빈도	289	224	691	1,204
	비중	19.67	18.02	20.06	19.56
3회	빈도	232	179	491	902
	비중	15.79	14.40	14.26	14.65
4회 이상	빈도	381	336	997	1,714
	비중	25.94	27.03	28.95	27.84
합계	빈도	1,469	1,243	3,444	6,156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2.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분석

1)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 청년공공근로사업의 참가자의 특성과 재취업 여부를 분석함.

(2) 분석 대상

- 이 분석은 2005년 1단계부터 2007년 4단계까지 총 10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강남구)에서 청년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참가자 총 2,516명의 원자료를 활용함.

(3) 분석 방법 및 내용

- 청년공공근로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위크넷 자료를 통해 참가자들이 재취업을 하였는지 파악함. 청년공공근로사업이 민간시장에서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재취업 여부와 개인특성간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청년공공근로자들의 세부적인 특징을 파악함.

2) 기본 특성 분석

(1) 개인특성 분석

- 일반적인 특성
 -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개인특성을 보면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와 비교했을 때, 연령은 20~30대가 대부분이었고,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반면, 전직업은 학생이 많음.
- 성별
 - 2,516명의 청년공공근로참가자 가운데 63.67%가 여성이고, 36.33%가 남성으로 여성 참가자가 남성보다 많았음. 이는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와 비교하여도 여성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연령
 - ~~20~~대인 청년공공근로참가자가 59.18%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9.93%, 20대 미만이 10.89% 순임.
- 전직업
 - 전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36.88%) > 학생(21.18%) > 일용근로자(16.10%) > 회사원(14.07%) > 서비스업(4.25%) > 자영업 및 주부(각각 2.94%) 등의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음. 청년공공근로인 경우 졸업 후 취업을 못한 학생이 많이 참가함.
- 교육수준
 - 결측값 9명을 제외한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교육수준은 고졸(37.22%) > 대졸(33.51%) > 전문대졸(19.94%) > 무학력(6.22%) > 대학원(0.84%) > 중졸(1.79%) > 초졸(0.48%)의 순으로 나타남. 전문대졸 이상이 54.3%로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보다 교육수준이 높았음.
- 자격증
 - 청년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대부분인 97.14%가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음.
- 장애인
 - ~~2516~~명 중 5.45%인 137명만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 노숙자
 - ~~2516~~명 중 0.20%인 5명만이 노숙자인 것으로 나타남.
- 생활보호자
 - ~~2516~~명 중 0.08%인 2명만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음.

<표 3-16>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개인특성

(단위: 명, %)

변수		빈도	비중
성별	여성	1,602	63.67
	남성	914	36.33
연령	20대 미만	274	10.89
	20대	1,489	59.18
	30대	753	29.93
전직업	공무원	3	0.12
	회사원	354	14.07
	농림수산업	5	0.20
	제조업	33	1.31
	서비스업	107	4.25
	자영업	74	2.94
	주부	74	2.94
	학생	533	21.18
	일용근로자	405	16.10
	기타	928	36.88
교육수준	무학력	156	6.22
	초졸	12	0.48
	중졸	45	1.79
	고졸	933	37.22
	전문대졸	500	19.94
	대졸	840	33.51
	대학원	21	0.84
	해당없음	9	-
자격증	있음	72	2.86
	없음	2,444	97.14
장애인	해당	137	5.45
	해당없음	2,379	94.55
노숙자	해당	5	0.20
	해당없음	2,511	99.80
생활보호자	해당	2	0.08
	해당없음	2,514	99.92
합계		2,516	

주: 각 교육수준별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비율임.

(2) 가계관련 특성 분석

- 가계관련 특성
 - 청년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경우 비세대주 혹은 부양가족이 없는 참가자가 대부분임.
- 세대주
 - 총 2,516명의 청년공공근로참가자 가운데 세대주인 참가자는 26.67%에 불과하였고, 73.33%는 비세대주인 것으로 나타나, 세대주가 대부분인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와 차이를 보임.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없는 참가자는 75.20%인 1,892명이었고, 부양가족이 있는 참가자는 나머지 24.80%인 624명임.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와 달리 대부분 부양가족이 없음.

<표 3-17>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개인 및 가계특성

(단위: 명, %)

변수		빈도	비중	
세대주	해당	671	26.67	
	해당없음	1,845	73.33	
부양가족	없음	0인	1,892	75.20
		소계	1,892	75.20
	있음	1인	170	6.76
		2인	123	4.89
		3인	136	5.41
		4인	195	7.75
		소계	624	24.80
합계		2,516		

(3) 재산 및 세금관련 분석

- 재산 및 세금관련 특징
 - 총 2,516명의 청년공공근로참가자 가운데 대부분이 재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가계소득 관련
 - 참가자 가운데 17.85%인 449명만이 가계소득이 있고, 나머지 82.15%인 2,067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참가자가 92.85%인 2,3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주거상태
 - 주거상태별 분포를 보면 기타(39.11%) > 전세(23.77%) > 자가(19.99%) > 월세(17.13%) 순으로 나타나 자가 혹은 기타에서 거주하는 참가자가 대부분임.
- 종합토지세 납부여부
 -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공공근로 참가자는 5.76%인 145명에 불과함.
- 재산세 납부 여부
 -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참가자는 8.47%에 불과함.
- 의료보험료 납부 여부
 - 총 참가자 가운데 29.69%만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음.

<표 3-18>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소득 및 세금 관련 특성

(단위: 명, %)

변수		빈도	비중
가계소득	있음	449	17.85
	없음	2,067	82.15
자동차	보유	180	7.15
	미보유	2,336	92.85
주거상태	자가	503	19.99
	전세	598	23.77
	월세	431	17.13
	기타	984	39.11
종토세	납부함	145	5.76
	납부안함	2,371	94.24
재산세	납부함	213	8.47
	납부안함	2,303	91.53
의료보험료	납부함	747	29.69
	납부안함	1,769	70.31
합계		2,516	

(4) 실업기간 및 반복참여

○ 실업기간

- 대부분은 사업참가 전 1년 미만의 단기 실업자로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와 다른 양상을 보임.
- 총 2,516명 가운데 1개월 미만이 948명(27.68%)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이상이 33.94%인 854명, 6개월이 20.39%인 513명 등의 순임.

○ 반복참여 횟수

- 단순 1회 참여자는 45.75%인 1,151명이었고, 장기 반복참여자는 13.56%인 341명에 불과하여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와 달리 장기 반복 참여자의 비중이 적음.

<표 3-19>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실업기간 및 반복참여횟수

(단위: 명, %)

변수		빈도	비중	
실업기간	1개월 미만	948	37.68	
	1개월	10	0.40	
	2개월	8	0.32	
	3개월	61	2.42	
	4개월	16	0.64	
	5개월	65	2.58	
	6개월	513	20.39	
	7개월	9	0.36	
	8개월	7	0.28	
	9개월	13	0.52	
	10개월	6	0.24	
	11개월	6	0.24	
	12개월 이상	854	33.94	
반복참여횟수	단순참여	1회	1,151	45.75
	일반 반복참여	2회	590	23.45
		3회	434	17.25
		4회	123	4.89
	장기 반복참여	5회	80	3.18
		6회	61	2.42
		7회	42	1.67
		8회	19	0.76
		9회	14	0.56
		12회	2	0.08
합계		2,516	100.00	

3) 재취업 분석

(1) 재취업 여부

- 총 2,516명의 청년공공근로 참가자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3.53%인 59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76.47%인 1,924명은 재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0>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재취업 여부

(단위: 명, %)

변수	빈도	비중
미취업	1,924	76.47
재취업	592	23.53
합계	2,516	100.00

(2) 성별 재취업

- 성별에 따른 재취업률을 보면, 여성의 경우 재취업률이 26.09%로 19.04%인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1>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재취업 여부

(단위: 명, %)

변수	여성		남성		합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미취업	1,184	73.91	740	80.96	1,924	76.47
재취업	418	26.09	174	19.04	592	23.53
전체	1,602	100.00	914	100.00	2,516	100.00

(3) 연령별 재취업

- 연령에 따른 재취업률을 보면, 20대가 26.26%, 20대 미만 20.44%, 30대가 19.26%로 나타남.

<표 3-22>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연령에 따른 재취업 여부

(단위: 명, %)

변수	20대 미만		20대		30대		합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미취업	218	79.56	1,098	73.74	608	80.74	1,924	76.47
재취업	56	20.44	391	26.26	145	19.26	592	23.53
전체	274	100.00	1,489	100.00	753	100.00	2,516	100.00

(4) 전직업별 재취업

- 자영업이었던 참가자의 재취업률은 35.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회사원(28.25%) > 학생(26.27%) > 기타(22.84%) > 서비스업(20.56%) > 주부(18.92%) > 일용근로자(18.52%) > 제조업(9.09%) 등의 순임.

<표 3-23>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전직업에 따른 재취업 여부

(단위: 명, %)

변수	공무원		회사원		농림수산업		제조업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미취업	3	100.00	254	71.75	5	100.00	30	90.91
재취업	0	0.00	100	28.25	0	0.00	3	9.09
전체	3	100.00	354	100.00	5	100.00	33	100.00

변수	서비스업		자영업		주부		학생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미취업	85	79.44	48	64.86	60	81.08	393	73.73
재취업	22	20.56	26	35.14	14	18.92	140	26.27
전체	107	100.00	74	100.00	74	100.00	533	100.00

<표 계속>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전직업에 따른 재취업 여부

(단위: 명, %)

변수	일용근로자		기타		합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미취업	330	81.48	716	77.16	1,924	76.47
재취업	75	18.52	212	22.84	592	23.53
전체	405	100.00	928	100.00	2,516	100.00

(5) 교육수준별 재취업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중졸이하의 재취업률은 8.89%, 고졸은 18.44%였고, 초졸은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문대졸은 30.80%, 대졸은 25.00%, 대학원은 38.10%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4>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재취업 여부

(단위: 명, %)

변수	무학력		초졸		중졸		고졸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미취업	114	73.08	12	100.00	41	91.11	761	81.56
재취업	42	26.92	0	0.00	4	8.89	172	18.44
전체	156	100.00	12	100.00	45	100.00	933	100.00

변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합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미취업	346	69.20	630	75.00	13	61.90	1,917	76.47
재취업	154	30.80	210	25.00	8	38.10	590	23.53
전체	500	100.00	840	100.00	21	100.00	2,507	100.00

(6) 가계소득 및 재취업 여부

- 가계소득이 없는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재취업률이 가계소득이 있는 참가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계소득이 없는 경우 취업률이 26.09%, 반면 가계소득이 있는 경우 취업률이 19.04%에 불과함.
- 가계의 소득여부는 청년들의 재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침.

<표 3-25>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가계소득 유무에 따른 재취업 여부

(단위: 명, %)

변수	가계소득 없음		가계소득 있음		합계	
미취업	1,184	73.91	740	80.96	1,924	76.47
재취업	418	26.09	174	19.04	592	23.53
전체	1,602	100.00	914	100.00	2,516	100.00

(7) 참여횟수 및 재취업 여부

- 참여횟수가 늘어날수록 재취업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8회 이상 참가자의 경우 전혀 취업이 되지 않고 있음.
- 1회 단순참여자의 경우 취업자 비중이 25.37%였으나, 2회의 경우 25.08%, 3회 23.04%, 4회 21.14%였음.
- 5회 이상 참여자의 경우 취업자 비중이 현격히 떨어지는데 5회 참여자 12.50%, 6회 참여자 18.03%, 7회 참여자 11.90%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8~12회 참여자는 전혀 취업을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공공근로 참여자의 전반적인 재취업률이 낮을 뿐 아니라 반복참여자의 재취업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공공근로는 단기간만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청년층도 일부는 공공근로를 고용의 일환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음.

<표 3-26>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참여횟수에 따른 재취업 여부

(단위: 명, %)

변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미취업	빈도	859	442	334	97	70	50
	비중	74.63	74.92	76.96	78.86	87.50	81.97
재취업	빈도	292	148	100	26	10	11
	비중	25.37	25.08	23.04	21.14	12.50	18.03
전체	빈도	1,151	590	434	123	80	61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변수		7회	8회	9회	12회	합계
미취업	빈도	37	19	14	2	1,924
	비중	88.10	100.00	100.00	100.00	76.47
재취업	빈도	5	0	0	0	592
	비중	11.90	0.00	0.00	0.00	23.53
전체	빈도	42	19	14	2	2,516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 실업기간 및 재취업 여부

- 실업기간에 따른 재취업률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 전 실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재취업률은 27.71%, 1개월 미만이 22.47%, 1~11개월 사이가 20.17%였던 것으로 나타남.
- 실업기간이 길었던 청년층이 공공근로 후 취업하려는 의욕이 강한 것 같음.

<표 3-27>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실업기간에 따른 재취업 여부

(단위: 명, %)

변수		1개월 미만	1~11개월	12개월 이상	합계
미취업	빈도	735	570	619	1,924
	비중	77.53	79.83	72.48	76.47
재취업	빈도	213	144	235	592
	비중	22.47	20.17	27.52	23.53
전체	빈도	948	714	895	2,516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3. 요약 및 정리

1)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1) 빈도분석 결과

-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40대 이상 중고령자가 대부분이고 전직은 일용직, 주부가 많으며 저학력자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6%p가량 많았음.
 - 연령대로 보면 40~50대가 전체 참가자의 84.39%로 대부분을 차지함.
 - 전직업이 일용근로자 혹은 주부였던 참가자가 44.49%로 가장 많았음.
 -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61.2%로 저학력자가 과반수임.
- 가계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세대주였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 전체 6,156명 가운데 4,797명(77.92%)이 세대주였음.
 - 부양가족이 없는 참가자는 3,451명(56.06%)이었음. 부양가족이 있는 참가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1인인 참가자가 가장 많았음.

- 가계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었음.
 - 가계소득이 있는 참가자는 총 6,156명 중 23.86%인 1,469명에 불과함.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참가자는 4.48%인 276명에 불과함.
 - 참가자의 6.92%인 426명만이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참가자는 각각 3.74%(230명), 8.51%(524명)에 불과함.
 - 참가자 가운데 79.00%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음.
- 실업기간을 살펴보면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참여가 가장 많았음.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이전 실업기간의 경우 12개월 이상이었던 참여자가 55.95%였고, 1개월 미만이 23.86%, 1~11개월 사이가 20.19%였음.

(2)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 성별에 상관없이 40대 이상 중·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함.
 - 남성 및 여성 모두 40~5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40~50대가 84.17%(2,994명), 남성의 경우는 84.69%(2,201명)이었음
- 전직업을 살펴보면 남자는 일용직, 여자는 주부가 가장 많았음.
 - 여성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고 전직업이 주부였던 참가자가 29.32%(1,043명)로 가장 많았음. 반면 남성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고 전직업이 일용근로자였던 참가자가 38.36%(997명)로 가장 많았음.
-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 세대주임.
 - 여성의 경우 70.48%(2,507명), 남성의 경우 88.11%(309명)임.
- 성별에 상관없이 중졸이하의 저학력자 비중이 높았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중졸이하가 과반수임. 여성의 경우 63.63%(2,244명),

남성의 경우 57.94% (1,486명)가 여기에 해당됨.

(3) 참여횟수 및 교차분석 결과

- 반복 참여자가 1회 참여자보다 많았고, 4회 이상 장기 반복참여자도 많았음.
 -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1회 참여한 참가자는 37.95%(2,336명)인데 반해, 2회 이상 참가자는 62.05%인 3,820명이었음. 특히 4회 이상 장기 반복참여자도 27.84%나 있었음.
- 여성 장기 반복참여자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음.
 - 장기 반복참여자는 여성의 경우 28.93%, 남성의 경우 26.36%를 차지함.
- 교육수준이 낮은 참가자의 반복 참여비중이 높았음.
- 연령별로 보면 40~50대 중·고령층에서 장기 반복참여자의 비중이 높았음.
 - 40대 혹은 50대 참가자의 장기 반복참여자의 비중은 약 30%이나, 40대 미만은 23.0%, 60대 이상은 10.7%였음.
- 전직업이 일용근로자, 농림수산업, 주부 등 비정규직에 종사한 일반 공공근로 참여자의 장기 반복참여 비중이 다른 직종에 종사했던 참여자보다 높았음.
- 가계관련 특성에 따른 참여횟수를 살펴보면, 세대주의 장기 반복참여 비중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보다 높았음.
 - 세대주인 경우 장기 반복참여 비중(29.96%)이 비세대주인 경우 (20.38%)보다 높았음.
- 사업 참가전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반복 참여비중이 가장 높았음.
 - 실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참여자의 장기 반복 참여비중은 28.95%, 1~11개월인 참여자는 27.03%, 1개월 미만인 참여자는 25.94%였음.

(4) 반복참여자의 특성

- 반복참여자의 특성은 여성, 40대, 세대주, 중졸이하, 일용직 혹은 주부 출신, 장기실업자임.

2)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1) 빈도분석 결과

- 개인특성을 보면 여성이 많고, 전직은 학생이 많으며,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음.
 - 성별로 보면 여성(63.63%)이 남성(36.33%)보다 1.7배가량 많았음.
 - 연령은 20대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함.
 - 전직업이 학생·일용근로자 혹은 회사원이었던 참가자가 가장 많았음.
 - 참가자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참가자의 대부분인 97.14%가 어떠한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청년공공근로 참가자는 비세대주 혹은 부양가족이 없는 참가자가 대부분인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대부분인 73.33%가 비세대주였음.
 - 부양가족이 없는 참가자가 75.20%로 대부분이었음.
- 대부분이 가계소득이 없고, 재산을 보유하지 않음.
 - 가계소득이 있는 참가자는 17.85%에 불과함.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참가자는 7.15%인 180명에 불과함.
 - 참가자의 대부분인 80.01%가 자가(自家) 혹은 기타형태의 주거상태를

보임.

-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참가자는 각각 5.76%(145명), 8.47%(213명)에 불과함.
- 참가자 가운데 70.31%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음.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에 비해 대부분이 단기 실업자였고, 단기 참여자였음.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이전 실업기간의 경우 1년 미만인 단기 실업자가 전체의 66.06%였음.
 - 장기 반복참여자 13.5%로 비중이 적음.

(2)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 공공근로사업 참가 이후 재취업률은 미진함.
 - 공공근로사업 참가 이후 재취업률은 23.53%에 불과함.
- 성별에 따른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 재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높았음.
 - 여성 재취업률은 26.09%인데 반해 남성은 19.04%에 불과함.
- 연령별 재취업률을 보면, 20대 참가자의 재취업률이 가장 높았음.
 - 20대의 재취업률은 26.26%로 가장 높고, 20대 미만은 20.44%, 30대는 19.26%로 상대적으로 낮음.
- 전직업이 자영업이었던 참가자의 재취업률이 가장 높았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소득이 없는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재취업률이 소득이 있는 참가자의 재취업률보다 높았음.
 - 가계소득이 없는 참여자의 재취업률은 26.09%인데 반해, 가계소득이 있는 참여자는 19.04%였음.

- 참여회수가 증가할수록 재취업률이 감소함. 특히 8회 이상 장기 반복참여자 가운데서는 재취업자가 전혀 없었음.
- 실업기간에 따른 재취업률을 보면 실업기간이 길수록 재취업률이 높음.
 - 공공근로사업 참가 이전 실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실업 참여자의 재취업률은 27.52%, 1개월 미만인 참여자는 22.47%, 1~11개월인 참여자는 20.17%였음.

3) 시사점

(1) 일반 공공근로사업

① 고용취약 계층

- 민간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기 실업자, 일용직 출신, 주부, 저학력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에 의존하는 경향이 드러남.

② 저소득층의 참여

- 참여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로 공공근로가 주요한 생계수단임.

③ 공공근로사업 참여의 반복참여

- 공공근로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1회 참여 인원보다 많았고, 반복 참여자 가운데서도 장기 반복참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1회 참여한 참가자들도 향후 잠재적인 반복 참여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공공근로사업 참여의 장기화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음.

④ 공공근로사업 목적의 변질

- 공공근로가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유도한

다는 초기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적지 않은 참가자들이 지속적인 생계형 일자리로 생각하고 반복참여하고 있음.

-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주민의 생계보호라는 명분아래 반복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2) 반복참여로 인한 문제점

- 예산과 선발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일인의 반복 참여는 공공근로사업에 참가를 원하는 신규진입자의 기회를 줄이게 됨.
- 장기반복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저학력과 저고용능력자들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업무 능력을 요하는 인력수요를 충족치 못하여 공공근로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이들의 공공근로 의존성은 구직활동 의욕 감퇴와 근로의욕 상실로 이어져 고용능력을 악화시킴.

(3) 청년공공근로사업

① 일시적 일자리 창출 및 직업탐색 기회

-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경우 생계목적보다는 일시적 일자리 참여에 목적을 둔 참가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됨.
 - 청년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경우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보다 반복참여자의 비중이 적음.
 -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참가 전 직업이 학생인 경우가 많고, 비세대주 및 부양가족이 없는 참가자가 대부분이었음. 또한 참여자의 교육수준도 높은 편임.

- 따라서 생계 혹은 가족부양의 목적으로 참여한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일자리 혹은 직업탐색의 기회로 이용함. 청년공공근로는 이들을 위한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정정도 있음.

② 취업 전단계로서의 역할 미비

- 청년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의 사업 참여 후 취업성공률은 23.52%에 불과함.
 -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전 직업이 학생인 비중이 높고 아직도 직업을 탐색 중인 20대 초중반의 참여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러한 낮은 재취업률은 청년공공근로가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교육수준이 낮거나, 실질적인 실직 그룹인 30대 이상의 참가자가 공공근로참가 후 직업을 구하는 비중이 낮음. 이들 30대는 고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로의욕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청년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일시적인 실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있으나, 실제 취업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역할이 미비하고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공공근로 참여자의 전반적인 재취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일부 반복참여자의 재취업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청년층의 공공근로는 단기간만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청년층 역시 일부는 공공근로를 고용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4) 정리

- 일반 공공근로와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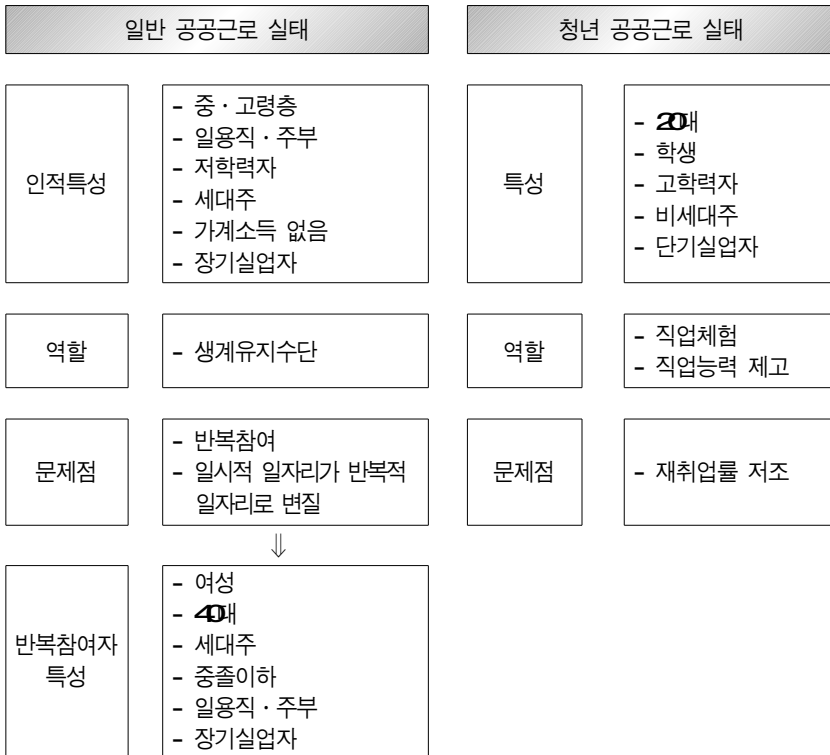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는 중·고령층·일용직, 주부, 저학력자가 대부분인데 반해, 청년공공근로 참가자는 전직이 학생이 많고 고학력자가 대부분이었음.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는 대부분이 세대주였고, 절반이 부양가족이 있는 반면,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의 대부분은 비세대주였고,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와 청년공공근로참가자는 대부분 가계소득이 없음.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는 대부분이 사업 참가이전 1년 이상의 실업기간을 거친 장기 실업자였는데 반해 청년공공근로 참가자는 대부분이 1년 미만의 실업기간을 거친 단기 실업자였음.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는 4회 이상 장기 반복참여자의 비중이 높았으나, 청년공공근로 참가자는 1회 혹은 단기 반복참여자의 비중이 높았음.
- 일반 공공근로의 반복참여자의 특성은 여성, 40대, 세대주, 저학력자, 일용직 혹은 주부 출신, 장기실업자임.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반 및 청년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고 생계 혹은 가족부양을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음.
 - 청년공공근로 참가자에 대한 일시적 일자리 창출효과는 있으나, 사업 참가 후 재취업률은 낮음.

<표 3-28>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 및 청년공공근로 참가자 특징 비교

특징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	청년공공근로 참가자
일반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층 • 일용직, 주부 • 저학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 학생 • 고학력자
가계관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세대주 • 절반이 부양가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비세대주 • 부양가족 없는 참가자가 대부분

<표 계속>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 및 청년공공근로 참가자 특징 비교

특징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	청년공공근로 참가자
재산 및 세금관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가계소득 없음 • 대부분 재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가계소득 있음
실업기간 관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1년 이상 장기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1년 미만 단기실업자
반복참여 관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반복참여자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혹은 단기 반복참여자 많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근로사업 참여가 장기화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생계 의존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으나 실제 민간시장에서 재취업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움
실업기간별 재취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이 길수록 공공근로 의존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기간이 길수록 재취업률 높음



<그림 3-1> 공공근로 실태와 참가자 특성

제2절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노동행태

-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의 노동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문분석을 하였음. 설문분석은 참가들이 판단하는 공공근로와 민간노동시장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민간노동시장에의 참여의지, 공공근로에 대한 의존도 등을 파악함. 이러한 설문자료에 의해 공공근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공공근로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함.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이 설문조사는 2008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구직 및 취업경험과 공공근로사업 후 민간시장에서의 재취업 전망에 대해 조사하여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둠.

2) 조사대상 및 내용

- 이 설문조사는 수거된 213명 가운데 이전에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179명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음.
- 이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연령·성별·교육수준·가족 부양여부 및 부양가족수 등 참가자의 개인 및 가구특성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과거 취업 및 구직활동 경험 여부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향후 민간시장에서의 재취업 전망

<표 3-29>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대상 설문지 목적·대상 및 내용

분 류	내 용
조사목적	과거의 취업경험과 향후 민간시장에서의 재취업 전망에 대한 조사
조사대상	2008년 2단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거한 설문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참가경험이 있는 179명
조사내용	1. 개인 및 가구 특성 2. 과거 취업 및 구직활동 경험 3. 향후 민간시장에서의 재취업 전망

2. 응답자의 개인 및 가구특성

1) 개인특성

- 설문 응답자 179명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30~50대가 대부분이었고,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가 많았으며, 여성의 비중이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이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38.5%) > 30대(25.1%) > 40대(20.7%) > 20대(11.7%) > 60대 이상(4.4%) 순이었음.
- 참여사업별로 보면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가 77.6%, 청년공공근로 참가자가 나머지 22.3%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59.2%, 남성이 40.8%이었음.
-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31.3%) > 중졸(20.1%) > 전문대졸(13.9%) > 대학원(11.7%) > 초졸(11.3%) > 대졸(10.6%)의 순이었음.

<표 3-30> 응답자의 개인 특성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연령	20대	20	11.17
	30대	45	25.14
	40대	37	20.67
	50대	69	38.55
	60대 이상	8	4.47
참여사업	청년	40	22.35
	일반	139	77.65
성별	남성	73	40.78
	여성	106	59.22
교육수준	초졸	21	11.73
	중졸	36	20.11
	고졸	56	31.28
	전문대졸	25	13.97
	대졸	19	10.61
	대학원	21	11.73
	무응답	1	0.56
합계		179	100.00

2) 부양가족에 따른 가구특성

- 응답자의 부양가족에 따른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응답자가 60.7%로 과반수 이상이었음.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응답자중 대부분인 87.6%가 부양가족이 1~3명이라고 답변함.

<표 3-31> 응답자의 가구 특성

(단위 : 명, %)

변수		빈도	전체대비 비중	소계대비 비중
부양가족 있음	1명	35	20.23	33.33
	2명	28	16.18	26.67
	3명	29	16.76	27.62
	4명	9	5.20	8.57
	5명	4	2.31	3.81
	소계	105	60.69	100.00
부양가족 없음		68	39.31	-
합계		173	100.00	-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3. 과거 취업 및 구직경험

-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기 이전에 민간직장에서 퇴직하였거나 단순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개인 및 가정문제로 인한 자발적인 퇴직이 68.3%로 대부분이었고,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의 문제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나머지 31.7%였음.
-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사정(42.4%) > 건강문제 (20.2%) > 직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 혹은 감원(17.1%) > 자기사업의 부도 혹은 부진(8.2%) > 경영합리화에 의한 감원(6.3%) 순으로 나타남.

<표 3-32> 민간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단순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부도와 같은 직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 혹은 감원 등	27	17.09
경영합리화에 의한 감원	10	6.33
자기사업의 부도 혹은 부진으로 일자리를 잃음	13	8.23
건강문제로 일을 그만 둠	32	20.25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 둠	67	42.41
가족문제로 부득이 그만 둠	9	5.70
합계	158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외에 민간시장에서 일을 그만둔 시기에 대한 질문에 2년 초과가 44.7%로 가장 많았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년 초과(44.7%), 3개월 이하(24.2%) 순임.

<표 3-33> 민간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단순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3개월 이하	41	24.12
4~6개월	11	6.47
7~9개월	2	1.18
10~12개월	17	10.00
13~18개월	5	2.94
17~24개월	15	8.82
24개월 초과	76	44.71
합계	170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을 포함하여 실직 이후 최근 1년간의 구직등록 여부 및 횟수를 묻는 질문에 91.4%가 구직등록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구직등록을 한 인원 가운데 구직등록 횟수는 1~3회가 전체의 72.3%로 가장 많았고, 6회 이상 구직등록을 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8.8% 있었음.

<표 3-34> 실업 이후 최근 1년간 구직등록 횟수

(단위 : 명, %)

변수		빈도	전체대비 비중	소계대비 비중
있음	1번	22	13.58	14.86
	2번	52	32.10	35.14
	3번	33	20.37	22.30
	4번	15	9.26	10.14
	5번	13	8.02	8.78
	6번 이상	13	8.02	8.78
	소계	148	91.36	100.00
없음		14	8.64	-
합계		162	100.00	-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최근 1년간 구직등록을 하였다고 답변한 응답자 가운데 구인처와의 면접 여부에 대해 76.9%가 면접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또한 면접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77.6%가 1~3회 가량 면접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함.

<표 3-35> 면접횟수

(단위 : 명, %)

변수		빈도	전체대비 비중	소계대비 비중
있음	1번	23	16.08	22.35
	2번	33	23.08	28.24
	3번	28	19.58	27.06
	4번	7	4.90	4.71
	5번	11	7.69	10.59
	7번 이상	8	5.59	7.06
	소계	110	76.92	100.00
없음		33	23.08	-
합계		143	100.00	-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면접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인처로부터 구직제의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받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58.6%로 나타남.
 - 구직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대부분인 67.5%가 1~2회 가량 구직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함.

<표 3-36> 면접을 통한 구직 제의 횟수

(단위 : 명, %)

변수		빈도	전체대비 비중	소계대비 비중
있다	1회	25	21.55	36.76
	2회	21	18.10	30.88
	3회	9	7.76	13.24
	4회 이상	6	5.17	8.82
	무응답	7	6.03	10.29
	소계	68	58.62	100.00
없음		48	41.38	-
합계		116	100.00	-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구직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이를 거절하였던 이유에 대해, 49.2%가 체력적인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들었고, 다음으로는 적은 임금(35.4%)과 지지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자리(15.3%) 순으로 답변하였음.

<표 3-37> 구직제의를 거절 이유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임금이 적어서	23	35.38
일이 체력에 비해 너무 힘들어서	32	49.23
일자리가 지지분하고 마음에 맞지 않아서	10	15.38
합계	65	1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실업기간 중 일거리를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77.6%가 직업능력이 떨어지거나, 많은 나이로 인해 일거리를 찾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22.3%는 체력부족 혹은 오랜 실업기간으로 인하여 일거리를 찾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음.

<표 3-38> 일거리를 찾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체력이 부족하다고 일거리를 주지 않음	17	11.89
직업능력(일자리 관련 기술,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일거리를 주지 않음	44	30.77
나이가 많다고 일거리를 주지 않음	67	46.85
실업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아무도 일거리를 주지 않음	15	10.49
합계	143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4. 향후 취업 전망

- 직전 단계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2008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까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집에서 쉬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민간직장에서 하루일당 혹은 비정기적으로 일하였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27.2%, 집안 사업을 무급으로 도왔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나머지 11.2%였음.

<표 3-39> 직전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후 2008년 2단계 참여까지의 활동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집에서 쉬	104	61.54
집안일 무급으로 함	19	11.24
일용직, 혹은 비정기적으로 일함	46	27.22
합계	169	1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공공근로사업이 없다면 민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전망이 있는냐는 질문에 54.8%는 전망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45.2%는 전망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표 3-40> 민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전망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있다	92	54.76
없다	76	45.24
합계	168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민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전망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를 대상으

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인 70.9%가 직업능력 부족 혹은 나이 문제를 그 이유로 꼽았음.

<표 3-41> 민간직장의 정규직으로 취업할 전망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체력이 부족하다고 일거리를 주지 않음	18	22.78
직업능력(일자리 관련 기술,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일거리를 주지 않음	20	25.32
나이가 많다고 일거리를 주지 않음	36	45.57
실업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아무도 일거리를 주지 않음	5	6.33
합계	79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민간직장에서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의 낮은 임금으로 취업이 된다면 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55.8%가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고 나머지 44.2%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였음.

<표 3-42> 민간직장에서 비정규직 혹은 낮은 임금의 일용직으로 취업할 의사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있다	97	55.75
없다	77	44.25
합계	174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민간직장에서 비정규직 혹은 낮은 임금의 일용직으로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60.5%가 “임금이 적어서”, 34.9%가 “일이 힘들어서” 라고 응답함.

<표 3-43> 민간직장에서 비정규직 혹은 낮은 임금의 일용직으로 취업할 의사가 없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임금이 적어서	52	60.47
일이 체력에 비해 너무 힘들어서	30	34.88
일자리가 저저분하고 마음에 맞지 않아서	4	4.65
합계	86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개인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1.8%가 개인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표 3-44> 개인사업 의향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있다	47	28.14
없다	120	71.86
합계	167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개인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58.6%가 자금이 없어서라고 답변하였고, 23.4%가 사업을 할 만한 기술 및 능력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18.0%는 사업에 성공할 자신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표 3-45> 개인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자금이 없다	75	58.59
사업성공 자신이 없다	23	17.97
사업을 할 만한 기술 및 능력이 없다	30	23.44
합계	128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공공근로사업의 임금과 근무여건을 민간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와 비교해서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임금은 적어도 일의 강도가 낮고 만족도는 높다고 함. 전반적으로 공공근로 근무환경이 높다고 응답함.
 - 임금수준의 경우 낮다(58.4%) > 비슷하다(44.8%) > 높다(3.2%) 순이었음.
 - 일의 강도는 비슷하다(56.2%) > 낮다(37.1%) > 높다(9.9%) 순이었음.
 - 일의 만족도는 비슷하다(55.1%) > 높다(20.3%) > 낮다(18.5%) 순이었음.
 - 근무환경은 비슷하다(58.7%) > 높다(23.1%) > 낮다(18.1%) 순이었음.

<표 3-46> 공공근로사업과 민간 일자리와의 비교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임금수준	낮다	90	58.44
	비슷하다	69	44.81
	높다	5	3.25
	소계	154	100.00
일의 강도	낮다	56	37.09
	비슷하다	85	56.29
	높다	15	9.93
	소계	151	100.00

<표 계속> 공공근로사업과 민간 일자리와의 비교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일의 만족도	낮다	31	18.56
	비슷하다	92	55.09
	높다	34	20.36
	소계	167	100.00
근무환경	낮다	29	18.13
	비슷하다	94	58.75
	높다	37	23.13
	소계	160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5. 요약 및 이론적 분석

1) 요약

- 2008년 2단계 참여자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개인 및 가구특성

-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30~50대가 대부분이었고,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와 여성의 비중이 높았으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임.
- 부양가족이 있는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이었고, 그 중 부양가족이 1~3명인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음.

(2) 과거 취업 및 구직경험

-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기 이전에 민간직장에서 퇴직하였거나 혹은 단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개인 혹은 가족문제로 인한 자발적인 퇴직이 68.3%로 대부분이었고,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의 문제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나머지 31.7%였음.
-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외에 민간시장에서 일을 그만둔 시기에 대한 질문에 2년 이상이 가장 많음.
-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을 포함하여 실업 이후 최근 1년간 구직등록 여부 및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이 구직등록을 한 적이 있고, 등록횟수는 1~3회가 가장 많았음.
 - 최근 1년간 구직등록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면접 요청을 받은 응답자는 76.9%였고, 그 중 77.6%가 1~3회 가량 면접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면접 경험자 가운데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제시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67.5%였고, 그 중 1~2회 가량 구직제의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대다수였음.
 - 구직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49.2%가 체력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직제의를 거절하였다고 함.
- 실업기간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직업능력 부족과 나이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음.

(3) 향후 취업 전망

- 직전 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이후 2008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의 활동을 묻는 질문에 38.9%만이 집안 사업을 돕거나 민

간직장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을 하였다고 대답했고, 나머지는 집에서 쉬면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공공근로사업이 없다면 민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전망이 있느냐는 질문에 45.2%가 전망이 없다고 답변함.
 - 민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전망이 없는 이유로는 대부분이 직업능력 부족 혹은 나이문제 때문이라고 답변함.
- 응답자의 44.2%는 민간직장에서 비정규직 혹은 낮은 임금의 일용직으로 취업이 되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의 과반수 이상인 60.7%가 임금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힘.
- 개인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인 71.8%가 의향이 없다고 답변함.
 - 개인사업을 할 의향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금이 없다는 답변이 58.6%로 가장 많았음.
- 공공근로사업과 민간 일자리를 비교할 때, 임금수준은 낮고, 일의 강도와 만족도, 근무환경은 높다고 응답함.

2) 공공근로의 이론적 분석

(1) 공공근로자의 특성

① 장기실업(persistent unemployment, hysteresis)

- 1980년대 유럽의 고실업률과 장기실업자 현상은 실업의 이력현상(hysteresis effect)을 보여주었음. 이는 일단 개인이 실업상태에 들어가면 일정 시간 내에 재취업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에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 직업을 잃은 이후

기존 직업능력이 노후화되어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함.

- Topel (1990)은 이러한 현상이 1970~80년대 미국에서도 중요했었고 실업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이 전 직장에 비해 15~40% 삭감되었다고 함. 이것은 이들의 기존 직업능력이 노후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함.
- 실업자의 고용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게 되고 장기실업자의 고용능력은 매우 떨어지게 됨. 해외 기간분석(duration analysis)에 의하면 실업기간이 길수록 취업확률은 낮아지게 됨 (Machin and Manning 1999).
- 공공근로 참가자들의 속성은 이러한 장기실업자의 대표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음. 공공근로는 이들 장기실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하거나 취업의지를 제고하기보다는 장기실업자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함.

(2) 공공근로의 효과

- 공공근로는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과 저소득층 생계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자 개인과 노동시장에 많은 부작용을 미치고 있음. 다음에서 대표적인 부작용과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알아보려고 함.

① 대체효과(crowding effect)

- 설문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느끼는 공공근로사업의 임금과 근무여건은 민간사업장과 비교해 보면 임금은 낮고, 근무여건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과거 일자리를 제외받았지만 거절하였다고 함.
-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공공근로 참가자들은 민간일자리와 공공일자리

효용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함. 즉 단순히 민간일 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기보다는 공공일자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거나 일반균형 측면에서 보면 공공근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민간일 자리를 대체하고 있음 (crowding effect). 즉 공공근로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잉여를 창출하기 보다는 공공과 민간 간의 일자리 대체만을 가져옴.

② 외부효과(external effect)

- 공공근로 참가자들이 공공근로의 근로조건이 민간일자리보다 높다고 판단한다면 민간부문의 임금수준을 올리고 빈 일자리(vacancy)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민간부문에 경제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초래함.

③ 근로의욕 감퇴(demoralized work attitude)

- 이전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이후부터 2008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특정한 직업 혹은 일거리가 없이 집에서 쉬었던 자발적인 실업자가 많고, 공공근로사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거나 생계를 의존하는 경향이 발생함.
- 직업능력 쇠퇴 혹은 나이,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주의 편견 때문에 공공근로 참가자들은 실업기간 중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함. 응답자의 42.86%는 민간직장에서 비정규직 혹은 낮은 임금의 일용직으로 취업이 되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근로사업은 이처럼 근로의욕이 감퇴된 저고용능력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함.

④ 인적자본 마모의 방지(precautionary measure for human resource attr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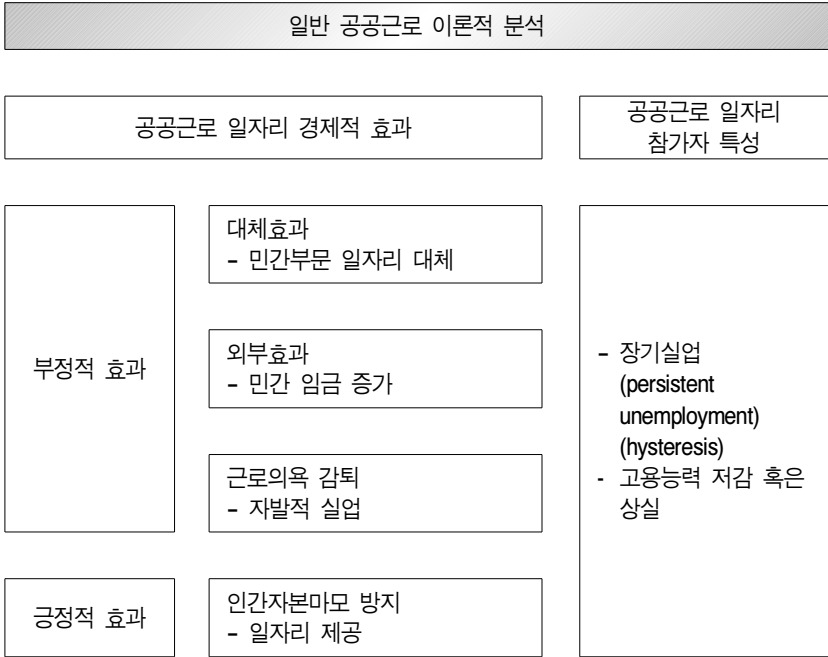
-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참가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집에서 쉰다고 응답함. 이러한 현상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거나 음주, 도박 등 비생산적인 행위에 참여하도록 해 정신과 건강을 해칠 수 있음.

- 공공근로가 없다면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인적자본이 마모되어 고용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공공근로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적자본 마모를 방지하는 예방적 역할을 함.

(3) 고용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

- 대표적인 고용정책은 직업알선(job search), 공공근로(temporary work experience at public sectors), 직업훈련(job training)임. Heckmann et al. (1999)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된 고용정책의 비용과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직업알선을 제외하고 이들 정책은 참가자가 얻는 소득효과보다 고용정책 비용이 크다는 것을 밝혀냈음.
- 한편 공공근로는 대체효과에 의해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반면 민간노동시장의 임금증가와 구직난만 가중시킴. 따라서 정부의 공공근로는 예산만 사용할 뿐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한편 공공근로가 없다면 참가자들이 여전히 민간부문에서 일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음. 그렇게 되면 이들은 빈곤과 실업으로 인한 질병, 직업능력의 손실, 정신적 박탈감으로 사회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공근로는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함.



<그림 3-2> 일반 공공근로 일자리 이론적 분석

제3절 사업별 참가자 특성 분석

1. 사업별 참가자 분석

1)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 공공근로사업의 세부사업별 참가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별 인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함.

(2) 분석 대상

- 이 분석은 2005년 1단계부터 2007년 4단계까지 총 8개 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분석함.
 - 2005년 1단계 1,544명, 2단계 1,599명, 3단계 1,511명, 4단계 2,416명
 - ~~2006~~년 1단계 1,889명, 2단계 1,483명, 3단계 1,206명, 4단계 1,602명
 - ~~2007~~년 1단계 1,345명, 2단계 1,420명, 3단계 1,385명, 4단계 1,308명

(3) 분석 방법 및 내용

- 이 분석의 방법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8개 구에서 실시한 사업들을 성격에 따라 총 6개의 사업(정보화 관련, 사회복지 관련,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타 서비스, 생활환경개선, 기타 생산성)으로 분류하고 각 사업과 개인특성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을 교차분석하였음.
- 한편, 2005년 4단계의 경우 교육수준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2005년 4단계 교육수준에 따른 사업별 참가자 분석은 제외하였음.

2) 공공근로사업 사업별 참가자 빈도 분석

- 2005년 1~4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사업별 누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 서비스(31.07%) > 생활환경개선(25.80%) > 기타 생산성(16.12%) > 정보화 관련(11.52%) > 사회복지 관련(10.77%) > 중소기업지원(4.73%) 순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추세는 각 연도별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단 2006년에는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비중이 정보화 관련 사업보다 높았음.
 - 2005년의 경우 기타 서비스(32.56%) > 생활환경개선(27.47%) > 기타

생산성(17.24%) > 정보화 관련(10.27%) > 사회복지 관련(8.80%) > 중소기업지원(3.66%) 순으로 나타남.

- 2006년의 경우 기타 서비스(31.10%) > 생활환경개선(25.99%) > 기타 생산성(15.52%) > 사회복지 관련(11.25%) > 정보화 관련(10.68%) > 중소기업지원(5.47%) 순으로 나타남.

- 2007년의 경우 기타 서비스(29.11%) > 생활환경개선(23.42%) > 기타 생산성(15.35%) > 정보화 관련(14.09%) > 사회복지 관련(12.77%) > 중소기업지원(5.26%) 순으로 나타남.

<표 3-47> 2005~2007년도 사업별 참가자 분포

(단위 : 명, %)

분류		2005년	2006년	2007년	누계
정보화 관련	빈도	726	660	769	2,155
	비중	10.27	10.68	14.09	11.52
사회복지 관련	빈도	622	695	697	2,014
	비중	8.80	11.25	12.77	10.77
중소기업지원	빈도	259	338	287	884
	비중	3.66	5.47	5.26	4.73
기타 서비스	빈도	2,302	1,922	1,589	5,813
	비중	32.56	31.10	29.11	31.07
생활환경개선	빈도	1,942	1,606	1,278	4,826
	비중	27.47	25.99	23.42	25.80
기타 생산성	빈도	1,219	959	838	3,016
	비중	17.24	15.52	15.35	16.12
합계	빈도	7,070	6,180	5,458	18,708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3) 참가자 특성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분석

(1) 연령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분석

- 2005~2007년 누적 연령별·사업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 정보화 관련사업은 20대(59.8%)가 가장 많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50대(57.0%)가 가장 많음
 - 중소기업지원과 기타 생산성사업은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음
 - 기타 서비스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모든 연령에 골고루 퍼져있음.

<표 3-48> 2005~2007년 누적 연령별 사업별 참가자 분포

(단위 : 명, %)

분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정보화 관련	빈도	1,290	622	150	87	6	2,155
	비중	59.86	28.86	6.96	4.04	0.28	100.00
사회복지 관련	빈도	416	323	554	681	40	2,014
	비중	20.66	16.04	27.51	33.81	1.99	100.00
중소기업지원	빈도	67	129	345	341	2	884
	비중	7.58	14.59	39.03	38.57	0.23	100.00
기타 서비스	빈도	1,084	1,106	1,631	1,837	155	5,813
	비중	18.65	19.03	28.06	31.60	2.67	100.00
생활환경개선	빈도	90	348	1,219	2,752	417	4,826
	비중	1.86	7.21	25.26	57.02	8.64	100.00
기타 생산성	빈도	68	522	1,103	1,170	153	3,016
	비중	2.25	17.31	36.57	38.79	5.07	100.00
합계	빈도	3,015	3,050	5,002	6,868	773	18,708
	비중	16.12	16.30	26.74	36.71	4.13	100.00

(2) 성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분석

- 여성 참가자가 남성보다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 사업에 걸쳐 여성 참가자가 많음.

<표 3-49> 2005~2007년 성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참가 평균분포

(단위 : 명, %)

분류		여성	남성	누계
정보화 관련	빈도	1,548	607	2,155
	비중	71.83	28.17	100.00
사회복지 관련	빈도	1,242	772	2,014
	비중	61.67	38.33	100.00
중소기업지원	빈도	665	219	884
	비중	75.23	24.77	100.00
기타 서비스	빈도	3,766	2,047	5,813
	비중	64.79	35.21	100.00
생활환경개선	빈도	2,524	2,302	4,826
	비중	52.30	47.70	100.00
기타 생산성	빈도	1,553	1,463	3,016
	비중	51.49	48.51	100.00
합계	빈도	11,298	7,410	18,708
	비중	60.39	39.61	100.00

(3) 학력수준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분석

- 정보화관련 사업은 전문대, 대졸, 대학원이 상대적으로 많음
- 생활환경개선사업과 기타 생산성사업은 중졸, 초졸이 많음.

<표 3-50> 2005년~2007년 누적 학력수준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참가 전체 평균 분포
(단위 : 명, %)

분류		무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누계
정보화 관련	빈도	13	43	60	945	360	525	7	1,953
	비중	0.67	2.20	3.07	48.39	18.43	26.88	0.36	100.00
사회복지 관련	빈도	93	313	334	635	137	301	14	1,827
	비중	5.09	17.13	18.28	34.76	7.50	16.48	0.77	100.00
중소기업지원	빈도	16	151	215	320	19	63	7	791
	비중	2.02	19.09	27.18	40.46	2.40	7.96	0.88	100.00
기타 서비스	빈도	166	897	985	1,939	414	606	5	5,012
	비중	3.31	17.90	19.65	38.69	8.26	12.09	0.10	100.00
생활환경개선	빈도	211	1,291	1,113	1,282	63	152	9	4,121
	비중	5.12	31.33	27.01	31.11	1.53	3.69	0.22	100.00
기타 생산성	빈도	108	640	627	973	88	147	5	2,588
	비중	4.17	24.73	24.23	37.60	3.40	5.68	0.19	100.00
합계	빈도	607	3,335	3,334	6,094	1,081	1,794	47	16,292
	비중	3.73	20.47	20.46	37.40	6.64	11.01	0.29	100.00

주: 2005년 4단계를 제외한 평균값임

제4장 공공근로사업 평가 및 정책방안

제1절 공공근로사업 평가

제2절 공공근로사업 정책방안

제4장 공공근로사업 평가 및 정책방안

제1절 공공근로사업 평가

-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임. 사업이 일정한 수입이나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를 재무제표 혹은 결산서로 작성하지 않음.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거나 정량화된 기초자료는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하고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내용은 공공근로사업 규모의 유지, 공공근로 참가자들의 근무태도, 공공근로사업의 세부사업별 성과, 공공근로의 운영방향, 민간위탁방안임.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이 설문조사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참가자를 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 사업성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둠.

2) 조사대상 및 내용

- 이 설문조사 참여자는 총 13개 구 92명의 공무원이었고, 그 중 각 구별

공공근로사업 업무담당자는 7명, 사업현장관리 공무원은 78명이었으며, 자료누락으로 인하여 분류가 불분명한 공무원이 7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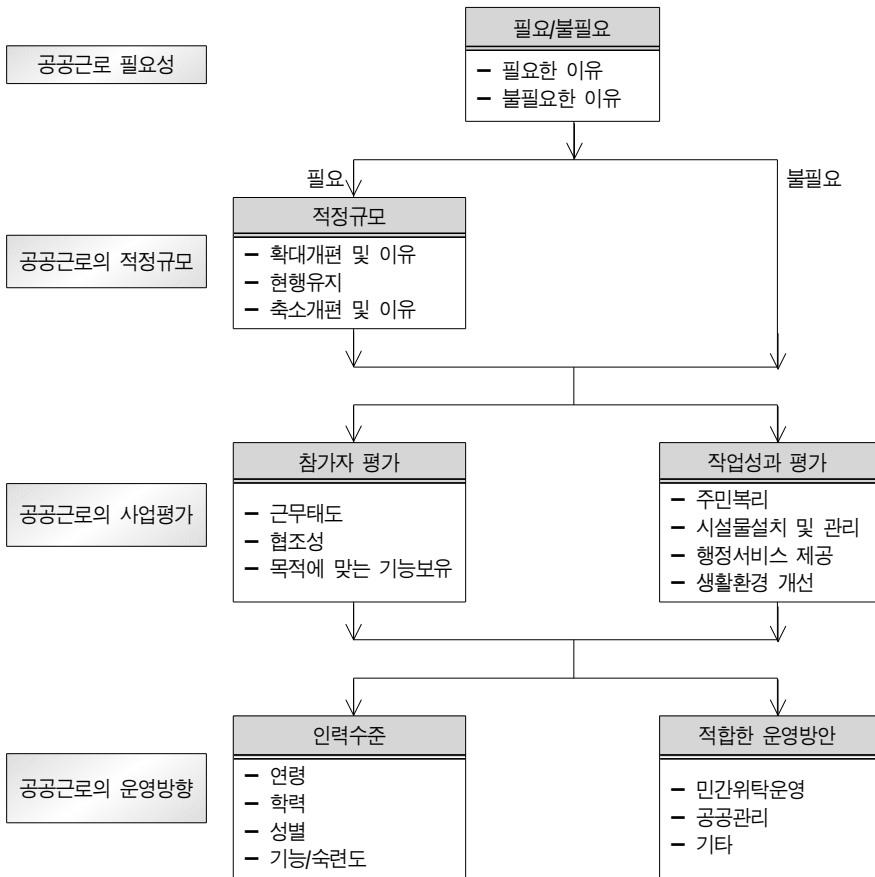
<표 4-1> 공무원 설문조사 참가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중
구	중구	4	4.35
	용산구	9	9.78
	성동구	14	15.22
	광진구	1	1.09
	노원구	2	2.17
	은평구	11	11.96
	서대문구	15	16.30
	마포구	1	1.09
	양천구	3	3.26
	구로구	1	1.09
	동작구	1	1.09
	송파구	19	20.65
	강동구	11	11.96
지위형태	공공근로관리 공무원	7	7.61
	현장관리 공무원	78	84.78
	분류불명	7	7.61
합계		92	100.00

- 이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공근로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의견
 -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한 평가와 각 사업별 작업성과 평가
 - 공공근로사업에 적합한 인력수준과 운영형태에 대한 의견
- 한편, 공공근로사업의 사업평가와 운영형태에 대한 측정항목은 아래와 같음.

- 공공근로사업 평가항목은 참가자 평가와 작업성과 평가로 나누어짐. 참가자 항목은 근무태도, 협조성, 적합한 기능보유로 나누어지고, 작업성과 항목은 세부사업별로 주민복지, 시설물설치 및 관리, 행정서비스 제공, 생활환경 개선 측면으로 나눔.
- 운영형태의 경우 인력수준과 운영방안으로 나누어 조사함. 인력수준의 경우 각 사업별 적정연령, 학력, 성별, 기능 및 숙련도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운영방안의 경우 민간위탁운영과 공공관리 가운데 어느 것이 적절한지 조사하였음.



<그림 4-1> 공무원 설문체계

2.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규모

1)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

-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92명 가운데 85.87%인 79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14.13%인 13명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표 4-2>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필요	79	85.87
불필요	13	14.13
합계	92	100.00

-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49.38%가 공무원 인력부족으로 인해 자치구 사업수요를 처리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28.40%가 생계가 곤란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주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19.75%가 참가자들에게 일시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재취업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 서울시의 공공근로 지침을 보면 공공근로가 공무원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을 금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공공근로를 실업자의 직업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본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행정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공공근로가 자치구의 필요한 행정서비스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

<표 4-3>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한 이유 (복수응답)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생계가 어렵고 근로의욕이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3	28.40
공무원 인력보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가하는 자치구의 사업수요를 처리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40	49.38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16	19.75
기타	2	2.47
합계	81	100.00

- 공공근로사업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일시적 일자리 제공 후에도 재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50.0%),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직자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39%)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표 4-4> 공공근로사업이 불필요한 이유 (복수응답)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일시적 일자리 제공 후에도 민간시장으로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9	50.00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7	38.89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는 세부사업들이 실제로는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	5.56
기타	1	5.56
합계	18	100.00

2) 공공근로사업의 적절한 규모

-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적절한 규모에 대한 질문에 50.0%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38.46%는 확대, 11.54%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1/3 정도의 공무원이 공공근로를 오히려 확대하여야 한다고 응답함.

<표 4-5> 공공근로사업의 적절한 규모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확대개편	30	38.46
현행유지	39	50.00
축소개편	9	11.54
합계	78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 향후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40.0%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에 비해 할당인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예를 들면 서울시의 2005~2007년 신청자 대비 할당인원 비율은 64.6%임.
- 저소득 가구가 많은 자치구의 경우 공공근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구청은 이들의 소득지원 측면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늘리기를 원함.
- 다음으로는 행정보조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27.50%) > 시설관리 수요증가(12.50%) > 생활환경개선 수요증가(10.00%)의 순으로 답변하였음. 특히 행정업무 보조 혹은 현장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음.

<표 4-6> 확대개편 의견에 대한 이유 (복수응답)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신청인원에 비해 할당인원이 적음	16	40.00
행정 보조 인력 수요의 증가	11	27.50
시설 관리 수요의 증가	5	12.50
생활환경개선 수요의 증가	4	10.00
기타	4	10.00
합계	40	100.00

- 향후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해야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4.44%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의 근무태도 불량, 지시불복종 등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꼽았음.

<표 4-7> 축소개편 의견에 대한 이유 (복수응답)

(단위 : 명, %)

변수	빈도	비중
도덕적 해이(근무태도불량, 지시불복종 등)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규모를 축소해야 함	4	44.44
사업특성에 맞는 적격인력이 부족하고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를 축소해야 함	1	11.11
사업의 생산성 저하로 인해 성과가 없는 사업을 축소해야 함	2	22.22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규모로 축소해야 함	1	11.11
기타	1	11.11
합계	9	100.00

3.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성과 평가

1)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한 평가

-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근무태도, 지시 및 관리 지침에 대한 협조성 그리고 개별사업의 목적에 맞는 기능보유 여부 등 세 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 성실한 근무와 같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전반적인 근무태도에 대한 질문에 65.13%가 매우 좋음 혹은 비교적 좋음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 관리자의 지시나 지침에 잘 협조하느냐는 질문에 82.41%가 매우 잘 협조하거나 비교적 잘 협조한다고 밝혔음.
 -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이 개별 사업의 목적에 맞는 숙련도, 자격증, 체력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40.22%가 매우 혹은 비교적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음. 공무원들의 공공근로 참가자의 직업능력 평가는 민간노동시장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다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직업능력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음.

<표 4-8>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변수	변수	빈도	비중
근무태도	매우 좋음	10	10.99
	비교적 좋음	52	57.14
	보통	25	27.47
	별로 좋지않음	4	4.40
	매우 좋지않음	0	0.00
	소계	91	100.00

<표 계속>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변수	변수	빈도	비중
협조성	매우 잘 협조함	24	26.37
	비교적 잘 협조함	51	56.04
	보통	16	17.58
	별로 협조하지 않음	1	1.10
	매우 협조하지 않음	0	0.00
	소계	92	101.10
숙련도	매우 그렇다	4	4.35
	비교적 그렇다	33	35.87
	보통	32	34.78
	별로 그렇지 않음	23	25.00
	매우 그렇지 않음	0	0.00
	소계	92	100.00

2) 세부 사업별 작업성과

- 공공근로사업을 먼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대분류함. 각 대분류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주민복지, 행정보조, 지역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생활환경개선의 항목 가운데 적절한 항목에서 평가함.

(1) 정보화 추진사업

① 주민복지

- 주민복지의 측면에서 정보화추진사업의 작업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보통(46.73%)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으나, 높음 혹은 매우 높음

의 평가도 40.18%를 차지해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주민관련 전산화사업과 행정자료전산화사업의 경우 작업성고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많아 세부사업 가운데 가장 작업성고가 좋은 것으로 평가됨.

<표 4-9> 정보화추진사업에 대한 주민복지 측면에서의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빈도	4	7	5	2	2	20
	비중	20.00	35.00	25.00	10.00	10.00	100.00
행정정보 DB구축사업	빈도	2	4	8	2	2	18
	비중	11.11	22.22	44.44	11.11	11.11	100.00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빈도	2	7	8	1	1	19
	비중	10.53	36.84	42.11	5.26	5.26	100.00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빈도	1	5	8	0	2	16
	비중	6.25	31.25	50.00	0.00	12.50	100.00
홍보 및 안내사업	빈도	1	4	12	0	0	17
	비중	5.88	23.53	70.59	0.00	0.00	100.00
기타 전산화사업	빈도	2	4	9	1	1	17
	비중	11.76	23.53	52.94	5.88	5.88	100.00
합계	빈도	12	31	50	6	8	107
	비중	11.21	28.97	46.73	5.61	7.48	100.00

주: 1) 기타 전산화사업은 전산프로그램개발, 전산가정방문해결 등을 의미함.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② 행정보조 측면

- 행정보조 측면에서 정보화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과반수 이상인 56.31%의 응답자가 작업성고가 높음 혹은 매우 높음이라고 답변하였고, 6개 세부사업별로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남.

<표 4-10> 정보화추진사업에 대한 행정보조 측면에서의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빈도	3	8	7	2	0	20
	비중	15.00	40.00	35.00	10.00	0.00	100.00
행정정보 DB구축사업	빈도	3	9	7	0	2	21
	비중	14.29	42.86	33.33	0.00	9.52	100.00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빈도	5	12	5	2	1	25
	비중	20.00	48.00	20.00	8.00	4.00	100.00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빈도	2	7	4	1	3	17
	비중	11.76	41.18	23.53	5.88	17.65	100.00
홍보 및 안내사업	빈도	2	7	8	2	0	19
	비중	10.53	36.84	42.11	10.53	0.00	100.00
기타 전산화사업	빈도	2	7	5	1	2	17
	비중	11.76	41.18	29.41	5.88	11.76	100.00
합계	빈도	17	50	36	8	8	119
	비중	14.29	42.02	30.25	6.72	6.72	100.00

주: 1) 기타 전산화사업은 전산프로그램개발, 전산가정방문해결 등을 의미함.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③ 전체 평가

- 전체적으로 정보화사업의 작업성과는 보통(38.0%), 높음(35.8%), 매우 높음(12.8%)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작업성과가 양호함.
- 모든 세부사업 역시 유사한 형태로 작업성과가 양호함.

<표 4-11> 정보화추진사업에 대한 전체적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빈도	7	15	12	4	2	40
	비중	17.50	37.50	30.00	10.00	5.00	100.00
행정정보 DB구축사업	빈도	5	13	15	2	4	39
	비중	12.82	33.33	38.46	5.13	10.26	100.00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빈도	7	19	13	3	2	44
	비중	15.91	43.18	29.55	6.82	4.55	100.00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빈도	3	12	12	1	5	33
	비중	9.09	36.36	36.36	3.03	15.15	100.00
홍보 및 안내사업	빈도	3	11	20	2	0	36
	비중	8.33	30.56	55.56	5.56	0.00	100.00
기타 전산화사업	빈도	4	11	14	2	3	34
	비중	11.76	32.35	41.18	5.88	8.82	100.00
합계	빈도	29	81	86	14	16	226
	비중	12.83	35.84	38.05	6.19	7.08	100.00

(2) 공공생산성사업

① 주민복리

- 주민복리 측면에서 살펴본 공공생산성사업의 작업성과는 보통(46.7%), 높음(27.4%), 매우 높음(16.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함.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로정비사업, 시설물정비사업과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음.

<표 4-12> 공공생산성사업에 대한 주민복리 측면에서의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도로정비사업	빈도	3	8	8	0	0	19
	비중	15.79	42.11	42.11	0.00	0.00	100.00
하천변정비사업	빈도	4	4	8	0	0	16
	비중	25.00	25.00	50.00	0.00	0.00	100.00
시설물정비사업	빈도	3	6	8	0	0	17
	비중	17.65	35.29	47.06	0.00	0.00	100.00
농업기반조성사업	빈도	1	3	7	1	1	13
	비중	7.69	23.08	53.85	7.69	7.69	100.00
녹지조성사업	빈도	2	5	9	2	0	18
	비중	11.11	27.78	50.00	11.11	0.00	100.00
국토공원화사업	빈도	2	2	7	2	0	13
	비중	15.38	15.38	53.85	15.38	0.00	100.00
중소기업지원사업	빈도	3	4	5	2	1	15
	비중	20.00	26.67	33.33	13.33	6.67	100.00
기타사업 (디자인개발사업 외)	빈도	2	2	6	3	0	13
	비중	15.38	15.38	46.15	23.08	0.00	100.00
합계	빈도	20	34	58	10	2	124
	비중	16.13	27.42	46.77	8.06	1.61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② 지역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지역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측면에서의 공공생산성사업의 작업성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낮음(25.4%), 보통(44.3%), 높음(22.6%), 매우 높음(5.7%)으로 평가되어 다른 대분류 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업성과가 부진함.

- 지역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측면에서 도로정비사업의 작업성과가 매우 높음 혹은 높음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많았음.
- 농업기반조성사업, 녹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기타사업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음.

<표 4-13> 공공생산성사업에 대한 지역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측면에서의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도로정비사업	빈도	1	6	6	3	0	16
	비중	6.25	37.50	37.50	18.75	0.00	100.00
하천변정비사업	빈도	1	4	6	2	0	13
	비중	7.69	30.77	46.15	15.38	0.00	100.00
시설물정비사업	빈도	1	5	6	2	0	14
	비중	7.14	35.71	42.86	14.29	0.00	100.00
농업기반조성사업	빈도	0	0	7	4	0	11
	비중	0.00	0.00	63.64	36.36	0.00	100.00
녹지조성사업	빈도	1	4	6	5	0	16
	비중	6.25	25.00	37.50	31.25	0.00	100.00
국토공원화사업	빈도	1	0	7	3	0	11
	비중	9.09	0.00	63.64	27.27	0.00	100.00
중소기업지원사업	빈도	0	3	4	4	1	12
	비중	0.00	25.00	33.33	33.33	8.33	100.00
기타사업 (디자인개발사업 외)	빈도	1	2	5	4	1	13
	비중	7.69	15.38	38.46	30.77	7.69	100.00
합계	빈도	6	24	47	27	2	106
	비중	5.66	22.64	44.34	25.47	1.89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③ 생활환경 개선

-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공공생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물었을 때 보통(48.2%), 높음(29.4%), 매우 높음(11.6%)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작업성과가 양호함.
- 그중 도로정비 사업, 시설물정비사업, 녹지조성사업의 작업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함.

<표 4-14> 공공생산성사업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도로정비사업	빈도	2	6	8	0	0	16
	비중	12.50	37.50	50.00	0.00	0.00	100.00
하천변정비사업	빈도	2	4	8	0	0	14
	비중	14.29	28.57	57.14	0.00	0.00	100.00
시설물정비사업	빈도	1	7	7	0	0	15
	비중	6.67	46.67	46.67	0.00	0.00	100.00
농업기반조성사업	빈도	1	1	8	0	2	12
	비중	8.33	8.33	66.67	0.00	16.67	100.00
녹지조성사업	빈도	2	6	7	2	0	17
	비중	11.76	35.29	41.18	11.76	0.00	100.00
국토공원화사업	빈도	2	2	5	3	0	12
	비중	16.67	16.67	41.67	25.00	0.00	100.00
중소기업지원사업	빈도	1	4	5	2	1	13
	비중	7.69	30.77	38.46	15.38	7.69	100.00
기타사업 (디자인개발사업 외)	빈도	2	3	6	1	1	13
	비중	15.38	23.08	46.15	7.69	7.69	100.00
합계	빈도	13	33	54	8	4	112
	비중	11.61	29.46	48.21	7.14	3.57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④ 전체 평가

- 전체적으로 평가한 공공생산성사업의 작업성과는 보통(46.4%), 높음(26.6%), 매우 높음(11.4%)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함.
- 그중 도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시설물정비사업, 녹지조성사업의 작업성과는 상대적으로 우수함.

<표 4-15> 공공생산성사업에 대한 전체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도로정비사업	빈도	6	20	22	3	0	51
	비중	11.76	39.22	43.14	5.88	0.00	100.00
하천변정비사업	빈도	7	12	22	2	0	43
	비중	16.28	27.91	51.16	4.65	0.00	100.00
시설물정비사업	빈도	5	18	21	2	0	46
	비중	10.87	39.13	45.65	4.35	0.00	100.00
농업기반조성사업	빈도	2	4	22	5	3	36
	비중	5.56	11.11	61.11	13.89	8.33	100.00
녹지조성사업	빈도	5	15	22	9	0	51
	비중	9.80	29.41	43.14	17.65	0.00	100.00
국토공원화사업	빈도	5	4	19	8	0	36
	비중	13.89	11.11	52.78	22.22	0.00	100.00
중소기업지원사업	빈도	4	11	14	8	3	40
	비중	10.00	27.50	35.00	20.00	7.50	100.00
기타사업 (디자인개발사업 외)	빈도	5	7	17	8	2	39
	비중	12.82	17.95	43.59	20.51	5.13	100.00
합계	빈도	39	91	159	45	8	342
	비중	11.40	26.61	46.49	13.16	2.34	100.00

(3) 공공서비스사업

① 주민복지

- 주민복지 측면에서 살펴본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보통(46.42%), 높음(29.7%), 매우 높음(14.1%)으로 나타나 양호함.

-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청소년지도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함.

<표 4-16>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주민복지 측면에서의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전체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빈도	4	15	11	1	0	31
	비중	12.90	48.39	35.48	3.23	0.00	100.00
사회복지 향상사업	빈도	5	8	10	1	2	26
	비중	19.23	30.77	38.46	3.85	7.69	100.00
새주소부여사업	빈도	4	3	8	1	0	16
	비중	25.00	18.75	50.00	6.25	0.00	100.00
실태조사사업	빈도	2	3	8	0	1	14
	비중	14.29	21.43	57.14	0.00	7.14	100.00
청소년 지도사업	빈도	2	5	7	2	0	16
	비중	12.50	31.25	43.75	12.50	0.00	100.00
환경감시 사업	빈도	2	2	9	2	0	15
	비중	13.33	13.33	60.00	13.33	0.00	100.00
물관리 사업	빈도	1	3	6	2	1	13
	비중	7.69	23.08	46.15	15.38	7.69	100.00
기타사업	빈도	1	5	10	1	0	17
	비중	5.88	29.41	58.82	5.88	0.00	100.00
합계	빈도	21	44	69	10	4	148
	비중	14.19	29.73	46.62	6.76	2.70	100.00

주: 1) 기타사업은 산불감시, 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 푸드뱅크지원사업 등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② 행정보조

- 행정보조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근로서비스사업의 작업성과는 보통(42.0%), 높음(29.3%), 매우 높음(13.4%)으로 나타나 양호함.
-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실태조사의 경우 성과가 높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많았음.

<표 4-17>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측면에서의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전체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빈도	10	12	11	2	1	36
	비중	27.78	33.33	30.56	5.56	2.78	100.00
사회복지 향상사업	빈도	2	9	10	1	1	23
	비중	8.70	39.13	43.48	4.35	4.35	100.00
새주소부여사업	빈도	3	4	8	2	0	17
	비중	17.65	23.53	47.06	11.76	0.00	100.00
실태조사사업	빈도	1	6	7	2	1	17
	비중	5.88	35.29	41.18	11.76	5.88	100.00
청소년 지도사업	빈도	1	4	8	3	1	17
	비중	5.88	23.53	47.06	17.65	5.88	100.00
환경감시 사업	빈도	2	3	7	2	2	16
	비중	12.50	18.75	43.75	12.50	12.50	100.00
물관리 사업	빈도	1	3	5	4	1	14
	비중	7.14	21.43	35.71	28.57	7.14	100.00
기타사업	빈도	1	5	10	0	1	17
	비중	5.88	29.41	58.82	0.00	5.88	100.00
합계	빈도	21	46	66	16	8	157
	비중	13.38	29.30	42.04	10.19	5.10	100.00

주: 1) 기타사업은 산불감시, 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 푸드뱅크지원사업 등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③ 생활환경 개선 측면

-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 본 공공근로서비스사업의 작업성과에 대하여는 보통(45.19%), 높음(29.3%), 매우 높음(13.3%)으로 나타나 양호함.
-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새주소부여사업, 물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작업 성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됨.

<표 4-18>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빈도	4	9	14	2	0	29
	비중	13.79	31.03	48.28	6.90	0.00	100.00
사회복지 향상사업	빈도	4	5	10	2	0	21
	비중	19.05	23.81	47.62	9.52	0.00	100.00
새주소부여사업	빈도	2	5	6	3	0	16
	비중	12.50	31.25	37.50	18.75	0.00	100.00
실태조사사업	빈도	2	3	7	0	1	13
	비중	15.38	23.08	53.85	0.00	7.69	100.00
청소년 지도사업	빈도	2	4	6	3	0	15
	비중	13.33	26.67	40.00	20.00	0.00	100.00
환경감시 사업	빈도	2	4	6	1	1	14
	비중	14.29	28.57	42.86	7.14	7.14	100.00
물관리 사업	빈도	1	4	4	2	1	12
	비중	8.33	33.33	33.33	16.67	8.33	100.00
기타사업	빈도	1	6	8	0	0	15
	비중	6.67	40.00	53.33	0.00	0.00	100.00
합계	빈도	18	40	61	13	3	135
	비중	13.33	29.63	45.19	9.63	2.22	100.00

주: 1) 기타사업은 산불감시, 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 푸드뱅크지원사업 등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④ 평가 정리

-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서비스사업의 작업성과에 대하여는 보통(44.5%), 높음(29.5%), 매우 높음(13.6%)으로 나타나 양호함.
-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작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표 4-19>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전체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전체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빈도	18	36	36	5	1	96
	비중	18.75	37.50	37.50	5.21	1.04	100.00
사회복지 향상사업	빈도	11	22	30	4	3	70
	비중	15.71	31.43	42.86	5.71	4.29	100.00
새주소부여사업	빈도	9	12	22	6	0	49
	비중	18.37	24.49	44.90	12.24	0.00	100.00
실태조사사업	빈도	5	12	22	2	3	44
	비중	11.36	27.27	50.00	4.55	6.82	100.00
청소년 지도사업	빈도	5	13	21	8	1	48
	비중	10.42	27.08	43.75	16.67	2.08	100.00
환경감시 사업	빈도	6	9	22	5	3	45
	비중	13.33	20.00	48.89	11.11	6.67	100.00
물관리 사업	빈도	3	10	15	8	3	39
	비중	7.69	25.64	38.46	20.51	7.69	100.00
기타사업	빈도	3	16	28	1	1	49
	비중	6.12	32.65	57.14	2.04	2.04	100.00
합계	빈도	60	130	196	39	15	440
	비중	13.64	29.55	44.55	8.86	3.41	100.00

주: 1) 기타사업은 산불감시, 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 푸드뱅크지원사업 등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4) 환경정화사업

① 주민복리

- 주민복리 측면에서 환경정화사업의 작업성과에 대해서 보통(40.0%), 높음(36.0%), 매우 높음(20%)으로 나타나 성과가 우수함.

<표 4-20>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주민복리 측면에서의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분리 및 수거사업	빈도	5	9	10	1	0	25
	비중	20.00	36.00	40.00	4.00	0.00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② 지역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관리측면에서 환경정화사업의 작업성과를 보면 보통(39.1%), 높음(26.1%), 매우 높음(17.4%)으로 나타나 성과가 우수함.

<표 4-21>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지역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분리 및 수거사업	빈도	4	6	9	3	1	23
	비중	17.39	26.09	39.13	13.04	4.35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③ 생활환경 개선

-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 환경정화사업의 작업성과를 살펴보면 보통(30.0%), 높음(36.7%), 매우 높음(30.0%)으로 나타나 성과가 우수함.

<표 4-22>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평가

(단위 : 명, %)

사업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분리 및 수거사업	빈도	9	11	9	1	0	30
	비중	30.00	36.67	30.00	3.33	0.00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④ 평가 정리

- 전체적으로 환경정화사업의 작업성과를 살펴보면 보통(35.9%), 높음(33.3%), 매우 높음(23.8%)으로 나타나 성과가 우수함.

<표 4-23>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단위 : 명, %)

사업명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분리 및 수거사업	빈도	18	26	28	5	1	78
	비중	23.08	33.33	35.90	6.41	1.28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4. 공공근로사업의 운영방향

- 공공근로의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세부사업 별로 적절한 인력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판단하고자 함.

1) 세부사업별 적절한 인력특성

(1) 정보화추진사업

① 연령

- 정보화추진사업에 적절한 연령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가 정보화추진사업에 알맞다고 답변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살펴봤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옴.

<표 4-24> 사업별·연령별 인력수준 (정보화추진사업)

(단위 : 명, %)

사업		청년층 참가자	일반 참가자	관계없음	전체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빈도	30	4	5	39
	비중	76.92	10.26	12.82	100.00
행정정보DB구축사업	빈도	34	3	2	39
	비중	87.18	7.69	5.13	100.00
행정자료전산화사업	빈도	36	3	2	41
	비중	87.80	7.32	4.88	100.00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빈도	28	5	2	35
	비중	80.00	14.29	5.71	100.00
홍보 및 안내사업	빈도	18	7	10	35
	비중	51.43	20.00	28.57	100.00
기타 전산화사업	빈도	26	3	4	33
	비중	78.79	9.09	12.12	100.00
합계	빈도	172	25	25	222
	비중	77.48	11.26	11.26	100.00

- 주: 1) 기타 전산화사업은 전산프로그래밍개발, 전산가정방문해결 등을 의미함.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② 교육수준

- 정보화추진사업 참가에 바람직한 교육수준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 정도가 대재이상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음.
-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행정정보DB구축사업, 행정자료전산화사업,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및 기타 전산화사업은 대재이상이, 홍보 및 안내사업은 고졸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음.

<표 4-25> 사업별·교육수준별 인력수준 (정보화추진사업)

(단위 : 명, %)

사업		고졸	대재이상	관계없음	전체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빈도	18	19	1	38
	비중	47.37	50.00	2.63	100.00
행정정보DB구축사업	빈도	17	20	1	38
	비중	44.74	52.63	2.63	100.00
행정자료전산화사업	빈도	19	20	1	40
	비중	47.50	50.00	2.50	100.00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빈도	16	17	1	34
	비중	47.06	50.00	2.94	100.00
홍보 및 안내사업	빈도	15	10	9	34
	비중	44.12	29.41	26.47	100.00
기타 전산화사업	빈도	11	19	2	32
	비중	34.38	59.38	6.25	100.00
합계	빈도	96	105	15	216
	비중	44.44	48.61	6.94	100.00

주: 1) 기타 전산화사업은 전산프로그래밍개발, 전산가정방문해결 등을 의미함.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③ 성별

- 대부분이 참가자의 성별과 정보화추진사업의 추진은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살펴봐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

<표 4-26> 사업별·성별 인력수준 (정보화추진사업)

(단위 : 명, %)

사업		남성	여성	관계없음	전체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빈도	1	0	37	38
	비중	2.63	0.00	97.37	100.00
행정정보DB구축사업	빈도	1	1	36	38
	비중	2.63	2.63	94.74	100.00
행정자료전산화사업	빈도	1	1	38	40
	비중	2.50	2.50	95.00	100.00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빈도	1	1	32	34
	비중	2.94	2.94	94.12	100.00
홍보 및 안내사업	빈도	0	0	34	34
	비중	0.00	0.00	100.00	100.00
기타 전산화사업	빈도	1	1	30	32
	비중	3.13	3.13	93.75	100.00
합계	빈도	5	4	207	216
	비중	2.31	1.85	95.83	100.00

주: 1) 기타 전산화사업은 전산프로그램개발, 전산가정방문해결 등을 의미함.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④ 기능 및 숙련도

- 정보화추진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참가자가 일정수준의 기능 혹은 숙련도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음.
- 다만 홍보 및 안내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기능 및 숙련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표 4-27> 사업별 기능 및 숙련도별 인력수준 (정보화추진사업)

(단위 : 명, %)

사업		필요	관계없음	전체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빈도	24	7	31
	비중	77.42	22.58	100.00
행정정보DB구축사업	빈도	24	6	30
	비중	80.00	20.00	100.00
행정자료전산화사업	빈도	27	6	33
	비중	81.82	18.18	100.00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빈도	22	6	28
	비중	78.57	21.43	100.00
홍보 및 안내사업	빈도	12	16	28
	비중	42.86	57.14	100.00
기타 전산화사업	빈도	22	6	28
	비중	78.57	21.43	100.00
합계	빈도	131	47	178
	비중	73.60	26.40	100.00

주: 1) 기타 전산화사업은 전산프로그램개발, 전산가정방문해결 등을 의미함.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⑤ 정리

- 각 사업별로 필요한 인력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정보화추진사업에는 청년층, 대재이상, 일정수준의 기능 및 숙련도를 지닌 인원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고, 성별은 별로 상관없다고 응답함.

<표 4-28> 정보화추진사업 선호 인력수준

사업	연령	교육수준	성별	기능/숙련도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청년	대재이상	관계없음	필요
행정정보DB구축사업	청년	대재이상	관계없음	필요
행정자료전산화사업	청년	대재이상	관계없음	필요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청년	대재이상	관계없음	필요
홍보 및 안내사업	청년	고졸	관계없음	관계없음
기타 전산화사업	청년	대재이상	관계없음	필요

(2) 공공생산성사업

① 연령

- 청년층보다 일반 참가자가 공공생산성사업에 적절하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음.

<표 4-29> 사업별·연령별 인력 수준 (공공생산성 사업)

(단위 : 명, %)

사업		청년층 참가자	일반 참가자	관계없음	전체
도로정비사업	빈도	1	18	16	35
	비중	2.86	51.43	45.71	100.00
하천변정비사업	빈도	1	16	16	33
	비중	3.03	48.48	48.48	100.00
시설물정비사업	빈도	2	17	13	32
	비중	6.25	53.13	40.63	100.00
농업기반조성사업	빈도	1	17	12	30
	비중	3.33	56.67	40.00	100.00
녹지조성사업	빈도	2	16	15	33
	비중	6.06	48.48	45.45	100.00
국토공원화사업	빈도	1	15	14	30
	비중	3.33	50.00	46.67	100.00
중소기업지원사업	빈도	3	14	13	30
	비중	10.00	46.67	43.33	100.00
기타사업 (디자인개발사업 외)	빈도	2	12	10	24
	비중	8.33	50.00	41.67	100.00
총합	빈도	13	125	109	247
	비중	5.26	50.61	44.13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② 교육수준

- 대부분이 공공생산성사업과 참가자의 교육수준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응답함.

<표 4-30> 사업별·교육수준별 인력 수준 (공공생산성 사업)

(단위 : 명, %)

사업		고졸	대재이상	관계없음	전체
도로정비사업	빈도	6	3	27	36
	비중	16.67	8.33	75.00	100.00
하천변정비사업	빈도	6	3	25	34
	비중	17.65	8.82	73.53	100.00
시설물정비사업	빈도	7	3	23	33
	비중	21.21	9.09	69.70	100.00
농업기반조성사업	빈도	6	3	22	31
	비중	19.35	9.68	70.97	100.00
녹지조성사업	빈도	8	3	23	34
	비중	23.53	8.82	67.65	100.00
국토공원화사업	빈도	6	4	21	31
	비중	19.35	12.90	67.74	100.00
중소기업지원사업	빈도	8	4	19	31
	비중	25.81	12.90	61.29	100.00
기타사업 (디자인개발사업 외)	빈도	10	6	15	31
	비중	32.26	19.35	48.39	100.00
총합	빈도	57	29	175	261
	비중	21.84	11.11	67.05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③ 성별

- 공공생산성사업에 대해 인력들의 성별은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음.
- 도로정비, 하천정비, 농업기반조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을 선호하였음.

<표 4-31> 사업별·성별 인력 수준 (공공생산성 사업)

(단위 : 명, %)

사업		남성	여성	관계없음	전체
도로정비사업	빈도	11	0	24	35
	비중	31.43	0.00	68.57	100.00
하천변정비사업	빈도	9	0	24	33
	비중	27.27	0.00	72.73	100.00
시설물정비사업	빈도	9	0	23	32
	비중	28.13	0.00	71.88	100.00
농업기반조성사업	빈도	8	0	22	30
	비중	26.67	0.00	73.33	100.00
녹지조성사업	빈도	6	1	26	33
	비중	18.18	3.03	78.79	100.00
국토공원화사업	빈도	5	1	24	30
	비중	16.67	3.33	80.00	100.00
중소기업지원사업	빈도	4	1	25	30
	비중	13.33	3.33	83.33	100.00
기타사업 (디자인개발사업 외)	빈도	2	1	27	30
	비중	6.67	3.33	90.00	100.00
총합	빈도	54	4	195	253
	비중	21.34	1.58	77.08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④ 기능 및 숙련도

- 전반적으로 참가자의 기능 및 숙련도가 사업 수행에 별로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8개 세부사업별로 보아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

<표 4-32> 사업별·기능 및 숙련도별 인력 수준 (공공생산성 사업)

(단위 : 명, %)

사업		필요	관계없음	전체
도로정비사업	빈도	8	27	35
	비중	22.86	77.14	100.00
하천변정비사업	빈도	7	26	33
	비중	21.21	78.79	100.00
시설물정비사업	빈도	6	26	32
	비중	18.75	81.25	100.00
농업기반조성사업	빈도	7	23	30
	비중	23.33	76.67	100.00
녹지조성사업	빈도	9	24	33
	비중	27.27	72.73	100.00
국토공원화사업	빈도	8	22	30
	비중	26.67	73.33	100.00
중소기업지원사업	빈도	7	23	30
	비중	23.33	76.67	100.00
기타사업 (디자인개발사업 외)	빈도	11	19	30
	비중	36.67	63.33	100.00
총합	빈도	63	190	253
	비중	24.90	75.10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⑤ 정리

- 연령별로 일반 공공근로사업자를 선호하고, 또한 교육수준과 성별, 기능 및 숙련도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전반적으로 답변하였음.

<표 4-33> 공공생산성사업 선호 인력수준

사업	연령	교육수준	성별	기능/숙련도
도로정비사업	일반	관계없음	관계없음	관계없음
하천변정비사업	일반	관계없음	관계없음	관계없음
시설물정비사업	일반	관계없음	관계없음	관계없음
농업기반조성사업	일반	관계없음	관계없음	관계없음
녹지조성사업	일반	관계없음	관계없음	관계없음
국토공원화사업	일반	관계없음	관계없음	관계없음
중소기업지원사업	일반	관계없음	관계없음	관계없음
기타사업 (디자인개발사업 외)	일반	관계없음	관계없음	관계없음

(3) 공공서비스사업

① 연령

-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의 선호가 전반적으로 약간 우세함.
-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의 경우에는 청년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선호함.
- 환경감시에서는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를 선호함.

<표 4-34> 사업별·연령별 인력 수준 (공공생산성 사업)

(단위 : 명, %)

사업명		청년층 참가자	일반 참가자	관계없음	전체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빈도	25	16	9	50
	비중	50.00	32.00	18.00	100.00
사회복지 향상사업	빈도	15	17	10	42
	비중	35.71	40.48	23.81	100.00
새주소부여사업	빈도	13	13	8	34
	비중	38.24	38.24	23.53	100.00
실태조사사업	빈도	11	16	7	34
	비중	32.35	47.06	20.59	100.00
청소년 지도사업	빈도	13	16	5	34
	비중	38.24	47.06	14.71	100.00
환경감시 사업	빈도	6	18	9	33
	비중	18.18	54.55	27.27	100.00
물관리 사업	빈도	5	17	11	33
	비중	15.15	51.52	33.33	100.00
기타사업	빈도	6	20	11	37
	비중	16.22	54.05	29.73	100.00
총합	빈도	94	133	70	297
	비중	31.65	44.78	23.57	100.00

주: 1) 기타사업은 산불감시, 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 푸드뱅크지원사업 등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② 교육수준

- 교육수준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고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5> 사업별·교육수준별 인력 수준 (공공서비스 사업)

(단위 : 명, %)

사업		고졸	대재이상	관계없음	전체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빈도	33	10	6	49
	비중	67.35	20.41	12.24	100.00
사회복지 향상사업	빈도	25	8	8	41
	비중	60.98	19.51	19.51	100.00
새주소부여사업	빈도	20	6	7	33
	비중	60.61	18.18	21.21	100.00
실태조사사업	빈도	21	6	6	33
	비중	63.64	18.18	18.18	100.00
청소년 지도사업	빈도	17	9	7	33
	비중	51.52	27.27	21.21	100.00
환경감시 사업	빈도	16	3	13	32
	비중	50.00	9.38	40.63	100.00
물관리 사업	빈도	17	2	13	32
	비중	53.13	6.25	40.63	100.00
기타사업	빈도	17	2	16	35
	비중	48.57	5.71	45.71	100.00
총합	빈도	166	46	76	288
	비중	57.64	15.97	26.39	100.00

주: 1) 기타사업은 산불감시, 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 푸드뱅크지원사업 등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③ 성별

- 성별과는 상관없다고 전반적으로 응답하였음.
- 세부적으로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실태조사사업, 청소년 지도사업의 경우는 여성을, 환경감시사업, 물관리사업, 기타사업의 경우는 남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6> 사업별·성별 인력 수준 (공공서비스 사업)

(단위 : 명, %)

사업		남성	여성	관계없음	전체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빈도	0	5	44	49
	비중	0.00	10.20	89.80	100.00
사회복지 향상사업	빈도	0	2	39	41
	비중	0.00	4.88	95.12	100.00
새주소부여사업	빈도	1	1	31	33
	비중	3.03	3.03	93.94	100.00
실태조사사업	빈도	0	1	32	33
	비중	0.00	3.03	96.97	100.00
청소년 지도사업	빈도	0	1	32	33
	비중	0.00	3.03	96.97	100.00
환경감시 사업	빈도	4	0	28	32
	비중	12.50	0.00	87.50	100.00
물관리 사업	빈도	6	0	26	32
	비중	18.75	0.00	81.25	100.00
기타사업	빈도	4	0	31	35
	비중	11.43	0.00	88.57	100.00
총합	빈도	15	10	263	288
	비중	5.21	3.47	91.32	100.00

주: 1) 기타사업은 산불감시, 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 푸드뱅크지원사업 등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④ 기능 및 숙련도

- 전반적으로 기능 및 숙련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8개 세부 사업별로 살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음.
- 다만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기능과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2.8%임.

<표 4-37> 사업별·기능 및 숙련도별 인력 수준 (공공서비스 사업)

(단위 : 명, %)

사업		필요	관계없음	전체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빈도	19	30	49
	비중	38.78	61.22	100.00
사회복지 향상사업	빈도	18	24	42
	비중	42.86	57.14	100.00
새주소부여사업	빈도	13	20	33
	비중	39.39	60.61	100.00
실태조사사업	빈도	10	22	32
	비중	31.25	68.75	100.00
청소년 지도사업	빈도	10	23	33
	비중	30.30	69.70	100.00
환경감시 사업	빈도	9	22	31
	비중	29.03	70.97	100.00
물관리 사업	빈도	10	21	31
	비중	32.26	67.74	100.00
기타사업	빈도	8	26	34
	비중	23.53	76.47	100.00
총합	빈도	97	188	285
	비중	34.04	65.96	100.00

주: 1) 기타사업은 산불감시, 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 푸드뱅크지원사업 등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⑤ 정리

- 연령별로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사업에서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을 선호하였고, 성별과 기능 및 숙련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음.

<표 4-38> 공공서비스사업 선호 인력수준

사업	연령	교육수준	성별	기능/숙련도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청년	고졸	관계없음	관계없음
사회복지 향상사업	일반	고졸	관계없음	관계없음
새주소부여사업	청년/일반	고졸	관계없음	관계없음
실태조사사업	일반	고졸	관계없음	관계없음
청소년 지도사업	일반	고졸	관계없음	관계없음
환경감시 사업	일반	고졸	관계없음	관계없음
물관리 사업	일반	고졸	관계없음	관계없음
기타사업	일반	고졸	관계없음	관계없음

(4) 환경정화사업

① 연령

-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일반 공공근로 참가자를 선호한다고 답변하였음.

<표 4-39> 사업별·연령별 인력 수준 (환경정화사업)

(단위 : 명, %)

사업		청년층 참가자	일반 참가자	관계없음	전체
분리 및 수거사업	빈도	5	21	16	42
	비중	11.90	50.00	38.10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② 교육수준

- 응답자의 대부분이 교육수준과는 관계없다고 답변하였음.

<표 4-40> 사업별·교육수준별 인력 수준 (환경정화사업)

(단위 : 명, %)

사업		고졸이상	대재이상	관계없음	전체
분리 및 수거사업	빈도	10	3	31	44
	비중	22.73	6.82	70.45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③ 성별

- 전반적으로 성별은 상관없으나, 부분적으로 남성을 선호함.

<표 4-41> 사업별·성별 인력 수준 (환경정화사업)

(단위 : 명, %)

사업		반드시 남성	반드시 여성	관계없음	전체
분리 및 수거사업	빈도	5	0	38	43
	비중	11.63	0.00	88.37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④ 기능 및 숙련도

- 응답자의 대부분이 특별한 기능 혹은 숙련도는 필요없다고 답변함.

<표 4-42> 사업별·기능 및 숙련도별 인력 수준 (환경정화사업)

(단위 : 명, %)

사업		필요	관계없음	전체
분리 및 수거사업	빈도	6	34	40
	비중	15.00	85.00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⑤ 정리

- 대부분이 청년층 보다는 일반 참가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특별한 교육수준 혹은 기능 및 숙련도도 필요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성별에 대한 선호도 없었음.

<표 4-43> 환경정화사업 선호 인력수준

사업	연령	교육수준	성별	기능/숙련도
분리 및 수거사업	일반	관계없음	관계없음	관계없음

2) 운영 형태

① 정보화추진사업

- 정보화추진사업의 적합한 운영형태를 묻는 질문에 주민관련 전산화, 행정정보 DB구축, 행정자료전산화와 같이 공공정보 처리는 행정관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단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홍보 및 안내사업과 기타 전산화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운영이 더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음.

<표 4-44> 사업별 사업운영 방향 (정보화추진사업)

(단위 : 명, %)

사업		민간위탁운영	공공관리	기타	전체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빈도	13	29	0	42
	비중	30.95	69.05	0.00	100.00
행정정보DB구축사업	빈도	15	28	1	44
	비중	34.09	63.64	2.27	100.00
행정자료전산화사업	빈도	15	28	0	43
	비중	34.88	65.12	0.00	100.00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빈도	21	18	0	39
	비중	53.85	46.15	0.00	100.00
홍보 및 안내사업	빈도	22	17	2	41
	비중	53.66	41.46	4.88	100.00
기타 전산화사업	빈도	21	20	0	41
	비중	51.22	48.78	0.00	100.00
총합	빈도	107	140	3	250
	비중	42.80	56.00	1.20	100.00

주: 1) 기타 전산화사업은 전산프로그램개발, 전산가정방문해결 등을 의미함.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② 공공생산성사업

- 공공생산성사업의 적합한 운영형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이상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답변하였음.

<표 4-45> 사업별 사업운영 방향 (공공생산성 사업)

(단위 : 명, %)

사업		민간위탁운영	공공관리	기타	전체
도로정비사업	빈도	26	15	0	41
	비중	63.41	36.59	0.00	100.00
하천변정비사업	빈도	26	15	0	41
	비중	63.41	36.59	0.00	100.00
시설물정비사업	빈도	26	15	1	42
	비중	61.90	35.71	2.38	100.00
농업기반조성사업	빈도	22	15	0	37
	비중	59.46	40.54	0.00	100.00
녹지조성사업	빈도	24	15	0	39
	비중	61.54	38.46	0.00	100.00
국토공원화사업	빈도	20	18	1	39
	비중	51.28	46.15	2.56	100.00
중소기업지원사업	빈도	24	15	0	39
	비중	61.54	38.46	0.00	100.00
기타사업 (디자인개발사업 외)	빈도	21	13	1	35
	비중	60.00	37.14	2.86	100.00
총합	빈도	189	121	3	313
	비중	60.38	38.66	0.96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③ 공공서비스사업

- 공공서비스사업에 적합한 사업운영 형태를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사회복지 사업, 새주소부여는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많았고, 청소년지도사업·환경감시사업의 경우는 민간위탁운영이 더 적합하다고 답변함.

<표 4-46> 사업별 사업운영 방향 (공공서비스 사업)

(단위 : 명, %)

사업		민간위탁운영	공공관리	기타	·전체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빈도	14	35	2	51
	비중	27.45	68.63	3.92	100.00
사회복지 향상사업	빈도	16	27	2	45
	비중	35.56	60.00	4.44	100.00
새주소부여사업	빈도	12	25	2	39
	비중	30.77	64.10	5.13	100.00
실태조사사업	빈도	17	18	2	37
	비중	45.95	48.65	5.41	100.00
청소년 지도사업	빈도	20	17	1	38
	비중	52.63	44.74	2.63	100.00
환경감시 사업	빈도	20	16	1	37
	비중	54.05	43.24	2.70	100.00
물관리 사업	빈도	16	18	2	36
	비중	44.44	50.00	5.56	100.00
기타사업	빈도	19	19	0	38
	비중	50.00	50.00	0.00	100.00
총합	빈도	134	175	12	321
	비중	41.74	54.52	3.74	100.00

주: 1) 기타사업은 산불감시, 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 푸드뱅크지원사업 등

2)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④ 환경정화사업

- 환경정화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답변함.

<표 4-47> 사업별 사업운영 방향 (환경정화사업)

(단위 : 명, %)

사업		민간위탁운영	공공관리	기타	전체
분리 및 수거사업	빈도	28	12	2	42
	비중	66.67	28.57	4.76	100.00

주: 위 표에서 비중은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비중임.

⑤ 정리

- 공공근로사업의 적합한 운영형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보화추진사업 및 공공서비스사업은 공공정보 보호와 주민복지 제공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으나, 공공생산성사업과 환경정화사업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음.
- 단, 정보화추진사업의 홍보 및 안내사업 및 기타전산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가운데 청소년지도사업·환경감시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운영이 더 적합하다고 답변함.

<표 4-48> 각 사업별 적합 운영형태

사업		운영형태	사업		운영형태
정보화 추진사업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공공관리	공공생산성 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민간위탁
	행정정보DB구축사업	공공관리		기타사업	민간위탁
	행정자료전산화사업	공공관리	공공서비스 사업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공공관리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민간위탁		사회복지 향상사업	공공관리
	홍보 및 안내사업	민간위탁		새주소부여사업	공공관리
	기타 전산화사업	민간위탁		실태조사사업	공공관리
공공생산성 사업	도로정비사업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사업	청소년 지도사업	민간위탁
	하천변정비사업	민간위탁		환경감시사업	민간위탁
	시설물정비사업	민간위탁		물관리 사업	공공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	민간위탁		기타사업	공공/민간
	녹지조성사업	민간위탁	환경정화사업	분리 및 수거사업	민간위탁
	국토공원화사업	민간위탁			

5. 요약 및 시사점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서울시 총 11개 구, 92명의 공공근로사업 업무 담당자 및 사업현장 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 평가 설문 결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 및 방향성

- 응답자의 대부분인 85.8%가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 가운데 49.38%는 공무원 인력부족으로 인해 자치구 사업수요를 처리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28.40%는 생계가 곤란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19.75%는 일시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취업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 공공근로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일시적 일자리 제공 후에도 민간시장에서의 재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직자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음.
-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규모에 대한 질문에 과반이 현행 규모대로 유지해야한다고 답변함.
 -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40.00%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에 비해 할당인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해야한다고 답변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44.44%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무태도불량, 지시불복종 등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들었음.

(2)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성과 평가

- 참가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근무태도, 지시 및 관리지침에 대한 협조성, 개별사업 목적에 맞는 기능보유의 3 개 항목 모두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 공공근로사업의 세부사업별 작업성과를 묻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음.
 - 정보화추진사업은 주민복지 및 행정보조 측면에서 작업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공공생산성사업의 작업성과는 양호함. 특히, 도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시설물정비사업, 녹지조성사업의 작업성과는 상대적으로 우수함.
 - 공공근로서비스사업의 작업성과는 양호함.
 - 전체적으로 환경정화사업의 작업성과는 우수함.

(3)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운영 방향

- 공공근로사업의 세부사업별 필요 인력특성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음.
 - 정보화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청년층, 대학재학이상의 교육수준과 일정 수준의 기능 및 숙련도를 지닌 참가자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함.
 - 공공생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선호하였고, 교육수준·성별·기능 및 숙련도와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단 디자인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기타사업의 경우 고졸의 교육수준을 요구하였음.
 -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고졸을 선호하였으나, 성별 기능 및 숙련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정화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수준, 기능 및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고, 성별에 대한 선호도 없었으나, 청년층보다는 일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가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공공근로사업의 적합한 운영형태에 대한 질문에 정보화추진사업 일부(통계베이스 구축사업, 홍보 및 안내사업, 기타 전산화사업)와 공공생산성사업, 그리고 공공서비스사업 일부(청소년 지도사업, 환경감시사업), 환경정화사업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은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해야한다는 응답자가 많았음.

2) 설문조사의 시사점

① 공공근로 목적의 변질

- 공공근로가 실업자에게 공공부문에서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유도한다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공공근로 지침과 어긋나게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얻고 참가자들이 공무원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질됨.
- 현재의 3% 정도의 실업률에서는 IMF 경제위기 당시의 실업률 감소 및 고용창출이라는 공공근로 목적을 유지할 필요도 없음.

② 공공근로 운영방식의 변화 필요성

- 공공근로가 원래 목적에서 변질되어 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고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시장접근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강병구 (2000), “공공근로의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경혜(1999),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성 평가”, 서울시정연구, 제7권 제1호, pp35-57
- 김미곤 (1999),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제31호, pp. 50-61
- 김학춘(1999), 동아논총 제36호 pp. 120-139
- 이주희 (2001),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소득보전과 일자리 창출”, 「한국사회학」 제35집, 제1호, pp. 207-228
- 임동진 (2001), “지방정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보」, 제13권, 제1호
- 윤홍식 · 김광혁 (2006), “여성과 남성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재취업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제24권, pp89-116
- 윤형호 (2008),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 장지연 (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51호, pp. 68-96
- 최근열 · 장영두 (2005), “공공근로사업의 성과평가”,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pp. 241-264
- Calmfors, L. (1994),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unemployment: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rucial design features”, OECD Economic Studies, 22, pp. 7-47

- Calmfors, L. and Lang, H. (1996), "Macroeconomic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in a union wage-setting model", *Economic Journal*, 105, pp 601-609
- Farber, H. (1993), "The Incidence and costs of job loss: 1982-1991",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 pp 73-119
- Machin, S. and Manning, A (1999),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ng term unemployment in Europe", in Ashenfelter, O. and Card, 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C, Amsterdam; Elsevier Science/North Holland
- Margolis, D. (1999), "Part-year employment, slow reemployment and earning losses: The case of worker displacement in France", in Haltiwanger, J et al (eds), *The Creation and Analysis of Employer-Employee Matched Data*, Amsterdam; Elsevier Science/North Holland
- Grubb, D. and Martin, J. (2001), "What works and for whom: A review of OECD countrie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8, pp 9-56
- Ruhm, C. (1991), "Are workers permanently scarred by job displace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 Topel (1990), "Specific price and unemployment: Measuring the costs and consequence of job loss",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33, pp 181-214
- Heckman, J., Lalonde, R., and Smith, J. (1999), "The economics and econometrics of active labor programs", in Ashenfelter, O. and Card, 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a, Amsterdam; Elsevier Science/North Holland

영문요약(**Abstract**)

The Policy for Operation of Public Works in Seoul

<u>Project Number</u>	<u>SDI 2008-PR-02</u>
<u>Research Staff</u>	<u>Hyung-Ho Yun (In Charge)</u> <u>Suk Im</u>

This research takes a look at what types of people participate in public job programs. We find that mainly middle aged unemployed people work in public job programs. It measures how often they return to labor market and support themselves after working for a limited period in public jobs.

Unfortunately we find that many participants rely on public jobs persistently and even refuse to accept offered jobs from private sector. They take advantage of lenient compensation of public jobs. Thus, public job programs did not succeed in returning the unemployed to labor market but resulted in creating job vacancy in private sector and raising wage increase.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we suggest social enterprise. This entity signs contracts with local government so it can perform public works public at which job programs are mainly aimed. If so, social enterprise will better manage labor force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allocating public money efficiently in job creation.

Table of Contents

Chapter I Introduction

Chapter II The Overview of Public Works in Seoul

1. Outline of Public Works
2. Change of Public Works in Seoul
3. Detailed Plans of Public Works in Seoul in 2008

Chapter III The Analysis of Public Works in Seoul

1. Analysis of Participants from Public Works
2. Labor Pattern of Participants from Public Works
3. Characteristics Analysis of Participants from Public Works

Chapter IV The Evaluation of Public Works in Seoul and Policy Recommendation

1. Evaluation of Public Works Projects
2. Policy Recommendation

Reference

시정언 2008-PR-02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발행인 정문건

발행일 2008년 7월 3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65 팩스 (02)2149-1289

값 5,000원 ISBN 978-89-8052-608-6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